
2019
공동 국제학술회의

한일 역사문제 해결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

2019년 11월 29일(금) 14:0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14:00-14:40 **개회식**

개 회 사 :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환 영 사 :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 영 사 : 장영달(우석대학교 명예총장)
 기조발제 : 서 승(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
 “한일 갈등의 걸림돌을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로”

14:40-15:30 **발표1**

- ①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박한용(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 ② 자료로 보는 강제동원 피해 실상 신호승(동북아역사재단)

15:30-15:40 휴식

15:40-17:00 **발표2**

- ③ 미국의 전후 재편과 한일과거사 박태균(서울대)
- ④ 한중일은 ‘일의대수’, ‘일위수’를 사이에 둔 이웃-중국인 강제노동 화해 사건에서
‘징용공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우치다 마사토(内田雅敏, 변호사)
- ⑤ 역사문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치우스제(邱士杰, 샤먼대학)

17:00-17:10 휴식

17:10-18:10 **종합토론**

사회 :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호리아마 아키코(堀山明子,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전원

기조발제	한일 갈등의 걸림돌을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로 서승(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	9
발표1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박한용(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21
	자료로 보는 강제동원 피해 실상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37
발표2	미국의 전후 재판과 한일과거사 박태균(서울대)	43
	한중일은 ‘일의대수’, ‘일위수’를 사이에 둔 이웃 - 중국인 강제노동 화해 사건에서 ‘징용공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57
	日・中・韓は「一衣帯水」、「一葦水」の間にある隣国 - 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から「徴用工問題」解決の道を模索する 内田雅敏(弁護士)	71
	역사문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치우스제(邱士杰, 샤먼대학)	87
	克服歴史問題與東亞和平 邱士杰(厦門大學)	98

[기조발제]

한일 갈등의 걸림돌을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로

서승(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

한일 갈등의 걸림돌을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로

서승(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

한반도 통일·화해·협력, 동아시아 평화를 연구과제로 작년 10월17일에 발족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한반도평화시대’에서의 남북·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심포지엄, 강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연구소 개소 1주년을 기해서 한일갈등문제를 중심과제로 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연속 시민강좌 ‘한일관계의 심층을 드러다 본다’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면적인 협조를 얻어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영훈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전면적 반박서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일 역사문제 해결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배려에 의한 것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 두고 한국정부는 종료를 연기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시와 미국의 막무간대 압력에 무릎을 꿇는 매우 구차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정지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계시키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에 무너졌다고도 하는데, 한국정부가 아무리 ‘종료의 일시정지’를 강조해도 일본정부는 애당초부터 왜곡과 거짓말로 한국정부의 발표를 절하하고 있어서 지소미아의 계속이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종료로 돌아갈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수년간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격동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한국은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주권에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한반도 핵미사일 위기로 북미대결은 전쟁직전까지 치달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기적처럼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 올 듯이 보였는데, 북미교섭이 암초에 걸려서 한반도 앞으로 못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 간의 약속의 실행은 미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남북관계는 붕괴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미관계도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정치에서도 광화문 광장을 극우세력이 점거하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제가 싸이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첨예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기업에게 식민지시기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한 대법 판결에 일본의 관민이 ‘약속 위반’이라고 일제히 반발하면서 한일갈등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상방 보복전의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약속’이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외상 합의’에서도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약속’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2·28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이 10억엔을 각출하여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한 것에 격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부와 무관한 국제인권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일본은 자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 서적으로 가득 차있으며, 서점마다 “반일종족주의”가 맨 앞에 수북이 싸여 있고, “문예춘추”를 비롯하여 각 월·주간지는 “반일종족주의”일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기형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일본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친북좌파정권’이라고 중상하고, 증오 선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베정권 하에서 일본의 반일정서는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한일갈등은 ‘약속 위반’ 운운을 넘어 한일 관계의 본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이로 선언 이래 우리 민족의 독립을 규정해야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조약 자체가 미일중심의 지역질서 형성에 주안을 두고 한국을 독립국으로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자리에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방 후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도, 아직 법적으로 식민지에서 완전히 독립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 한미, 한일 관계가 매우 불평등하고 취약한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 설정되어 있

는 것이 분명해지고서야 국민들은 국가(민족)주권의 중요함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자주, 자립하고자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난관은 국민의 주권의식의 고양에 의하여 만들어진 ‘촛불정권’이 ‘미군의 작통권’반환을 시야에 두고, 평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대미, 대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굴욕과 종속 속에 머물러 ‘바보의 상자’속에서 갇혀 살 수 밖에 없을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냉전분단체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그 하위 체계인 1965년 한일조약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미군 점령 하에 있던 일본의 (외교)주권을 회복하게 하고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인정을 부여하려고 소집된 것입니다. 동시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미군의 주둔을 반영구화하여 일본을 미국의 ‘속국화’시켜 동아시아 군사지배정책의 기축으로 삼으려 한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sub-system인 한일조약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낡은 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해야만 참된 주권국가로 남북의 평화, 화해, 협력을 이루고, 통일을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정권이 난폭하게 야기한 한일갈등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한일갈등의 밑뿌리에 있는 구조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1. 하나의 몸체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일제

한일갈등의 뿌리는 일제의 조선침략에 있습니다. 이 침략에 대해서도 일본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요즘은 “반일종족주의”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친일의 정당화를 하고, 일본식민지 지배에 대한 찬미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독립국에서 이러한 패설(悖說)이 백주에 횡행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전에 일본 우익들이 하던 “일본이 지배하지 않았으면 야만적인 러시아나 지나(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근대화(의 은인이다)”, “조선이 미개했기에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 “한반

도는 일본의 옆구리에 들이댄 비수"이기에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등의 주장을 이제는 한국사람이 앞장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친일파'라고 부르던 영혼을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일본이 전쟁에 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투쟁을 무화시키려 했으나, 사회의 정면에 나서기를 꺼려했는데, 이제는 '친일파'가 민 낮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을 무렵, 친일인명사전에서 친일파로 지탄 받은 박정희의 아들이 명예훼손으로 역사문제연구소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당시 "만주일보"에 실린 "한 몸으로써 폐하에게 충성"이라는 혈서를 천황에게 바친 '미담'이 보도된 사실을 공표하자,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가 SNS를 통해서 "친일은 애국"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친일파가 백주 대낮에 행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공장, 학교, 철도, 보건소, 병원, 수도, 도로, 관공시설, 광산 등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일제 군대에서 군사기술을, 고등경찰이나 헌병에게 고문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해방 후 빨갱이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겠느냐"는 자학적이고, 도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요즘 태극기부대로부터 이영훈 그룹까지 기본적으로 이 논리에 따르는 패륜·자학적인 난동이 버젓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란 "일제 통치의 협력자" 정도로 정의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일본의 서점에 가서 보니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일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제에 협조하는 앞잡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일찍 동아시아를 유린하고, 이제는 그 영광을 되찾으려는 아베와 한몫, 한 마음의 일본제국주의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마치도 "반일종족주의"를 한국의 책처럼 선전하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유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선전은 한국에서 책에 대한 권위부여의 근거로 사용되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일본에서 선전자료로 쓰는 식으로 순환적 상승작용을 만들고 자가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분에 조선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 철도, 우편, 전력, 산업, 교육, 사회, 농업·수리·관개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습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의 친일파에 의해서도 회자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식민지 경영은 일본에게는 적자였으며,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많이 투자했습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도 있습니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아프리카 침략과 지배의 합리화의 도구이던 '문명과 야만'의 이

원론은 외관이나 자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일본인의 마음속에 침전되다가, 때때로 차별과 증오로 분출됩니다.

2. 식민지 지배는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다

그러나 선의의 노예제가 없는 것처럼 선의의 식민지 지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0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유엔 주최의 '반 인종주의·차별 철폐' 세계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는 나치의 제노사이드에 비견되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노예는 자유, 즉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24시간 주인에게 예속되는 물건으로 거래됩니다. 식민지는 집단(민족)을 노예화시키는 체제입니다. 오늘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도 노예제의 옹호처럼, 전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은 21세기 최대의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일 관계의 전제가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1945년 일본군 점령 지역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한반도는 미·소에 의해 분단·점령 당하고, 3년간의 신탁 통치를 겪었습니다. 6·25전쟁이 시작한 이듬해인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한 연합국(미국)의 점령에 종지부를 찍고 주권을 회복시키는 국제법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강화회의는 소련·사회주의권의 불참에 더해 일본의 군사 침략·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국과 남북한은 일본의 요시다 총리의 반대로 배제되고,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만 모인 단독강화회의가 되었습니다.

1949년 동서독정부의 성립으로 연합국의 대독 점령시기가 종료되고 대소련 공산권 군사동맹인 NATO가 성립된 것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도 대공산주의 군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샌프란시스코 단독강화회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연합국의 대일 점령정책인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의 확인과 전후 일본의 영역 및 국제적 책무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주권' 회복 후에도 반 영

구적인 미군 주둔과 기지사용을 보장하는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을 미국의 속국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초청되지 않고 국민당정부(중화민국)만을 상대로 일화(日華)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반공진영의 대일전쟁 종결절차는 한국을 제외하고 종지부를 찍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남은 고리인 한일관계를 설정하는 교섭이 바로 개시되었습니다. 미국에게 공산권에 들어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에 따른 피해 복구와 과거 청산이라는 관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일본의 주도로 체결된 한일 조약

1948년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면서 이듬해 1월 도쿄에서 한국 대표부가 설치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바로 뒤인 1951년 10월 20일 도쿄에서 한일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일회담은 원래 일본과 한국이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배제하고 한국과만 수교협상을 벌인 것은 식민지 책임의 청산보다는 한일에게 정치·군사적인 협력을 하게 하고,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이익에 봉사하게 하자는 의도가 선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약은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 어업 협정,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한국 어업의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한 어로제한선(이승만 라인) 침범으로 억류되어 있는 어민석방이 일본 정부의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재일 한국인을 심각한 치안문제의 위해 요인으로 보고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에 관심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양국간의 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채권에 대한 청구권 정리를 명목으로 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명분이 없는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자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일 조약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식민지 지배의 성격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 자행된 병합조약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했고, 일본은 병합조약이 조선왕조(고종)와의 사이에서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5년 조약에서는 적법과 불법 어느 쪽으로도 입을 수 있게 “이

제는 무효”라고 얼버무리고 독도 영유권문제도 명기를 피하면서, 한일 간 외교적 화근을 남긴 채 체결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에 본격 개입한 미국이 작전병력을 제공하는 한국과 후방을 지원하는 일본의 긴밀한 연계를 강력히 주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미일의 정치적 승인과 일본의 정치자금 및 경제원조를 기대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와의 국교정상화는 전후 일본외교 현안인데다 일본자본의 한국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5. 식민지와 냉전의 추억-제국 일본의 재생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65년체제는 미국이 구축한 동아시아 냉전·분단 체제입니다. 또한 반 파시즘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그 내부의 파시즘을 보존·복원시켜 일본의 옛 군국주의 세력을 비호 활용하여 일본의 탈 군국주의 개혁을 유산시키고 만든 미일 결탁에 한국 친일군사독재정권을 종속시킨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말하는 ‘안정적 한일관계’란 반세기 전의 반공냉전체제 하의 한일 관계를 말하는데, 21세기의 오늘날에도 한일관계의 기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현실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미국에서는 초강대국의 체통도 벗어 던지고 미국과 자신의 작은 이익을 탐하며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여,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중국이 실용주의 경제대국화되고, 남북관계도 김대중 정권 이후 크게 변화했습니다. 작년 이래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미국에 추종할 줄 밖에 모르는 일본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커다란 정세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냉전시대의 추억에 고착되고 있어서 그 간에 확보한 고식적인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로서 한일은 양호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에 양국이 과거의 왜곡된 종속체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천황 즉위식에 간 이낙연 총리가 문대통령의 친서를 아베에게 전달하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약속을 지켜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G20 참가차 방일해 일본요인들과 만나려 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매우 무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한국정부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일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나, 아베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고 더욱더 기고만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교착상태를 풀려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이해가 되나, 아베는 그 성의와 선의를 나약함으로 오해하고 자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베의 표정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 허언과 속임수로 일본의 민심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반면, 광범한 일본사회와 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 교류를 선도하여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평화시대’의 그림을 제시하고 이성적 설득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배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뒤틀보다도 내부의 일제인 친일파를 청산하면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협력 증진하여 민족적 주권을 다져야 합니다. 일본과 국제 여론에 한일 관계의 실상을 이성적이고 성실하게 설득해내면서 거짓과 오만, 독선에 넘치는 아베정권을 정중하게 거부하고 동아시아 평화의 대의를 내걸고 일본의 각성된 시민운동과 결부해야 합니다.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65년체제는 넘어서야 할 역사적 장애물입니다. 한일갈등을 풀답시고 안일하게 일본에 타협하는 길은 오히려 갈등의 뿌리를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길은 멀어 보여도 이제는 한발씩 우리 겨레의 주체적 역량과 주권을 다져나가고, ‘한반도평화시대’와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할 것입니다.

발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

박한용(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자료로 보는 강제동원 피해 실상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박한용(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식민지 근대화론'의 인식 구조를 중심으로

박한용(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머리말

올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한편 한국인의 대일 과거사 청산 요구를 민족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일종족주의'라고 비하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와 자유 인권의 확장으로 파악하는 책이 출간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른바 뉴라이트 학계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낙성대연구소 계열이 2018년 12월부터 45회에 걸쳐 <위기 한국의 근원:반일 종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연속 강좌를 열어 그 내용을 간추려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미래사 2019)란 책이다. 이 책은 자신들을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연구자로서” “국익 우선주의”를 배격하고 “20세기 전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역사에 관련하여 오늘날의 한국인이 가지는 통념”이 실증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논증하고자“ 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¹⁾

이 책의 내용은 과거 이영훈 등 유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던 기존의 내용 일부와 새로 추가된 것(육군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한일청구권자금, 문제, 백두산 신화, 독도, 한반도에 박은 쇠말뚝, 구 총독부 청사의 해체) 등을 새로 추가하고, 특히 전시청동원체제기의 '강제동원'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한국인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나 대

1) 「반일종족주의」 책머리에, 4-5쪽 참조.

일 과거사 청산 욕구 등이 서구의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종족주의’라는 관기의 산물의 증좌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논리면에서 그들의 그간 입론에서 새로 바뀐 것은 없으며, 그 영역이 이조선총독부 청사 해체나 쇠말뚝 문제 등 온갖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국민’으로 못을 박고(도대체 이런 통계가 가능한 것인지?) 그 근원은 샤머니즘과 같은 집단 주술에 근거한 종족주의의 광기로부터 근원한다고 논리를 출발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일제강점기 일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그 바탕에 깔린 세계관이나 인간관은 기괴하기 짝이 없거니와, 그 책에서 내세운 사실과 사실의 해석(실은 주장에 가깝다)은 조만간 출간될 공동 집필 형식의 대중서에서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개별 사실에 대한 검토와 비판 대신 뉴라이트라 불리는 이들의 전체 역사관 또는 역사상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이들의 식민지근대화론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통상 언론이나 시민들 사이에는 뉴라이트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식민지 근대화론)만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들이 구축하는 역사상은 일제강점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 100년의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세기의 ‘성공국가’)를 존재하게 한 역사적 근원이자 핵심 요소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들은 학술을 표방하지만 매우 강산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지녔다. 수구 정치권이나 언론 또는 재벌의 지지와 후원을 매개로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관철하고자 했기에 정치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술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뉴라이트 정치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제한된 불량과 시간 관계상 이영훈 등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2)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이영훈의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같은 해 이영훈 등이 참가한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한 교과서 한국근현대사」(2008 기파랑)는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 교학사 판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파동(으로 이어졌다. 2013년 교학사 판 검인정 교과서와 별도로 이영훈 교수는 대학 동기가자 정치인인 김문수 당시 경기도 지사의 지원으로 경기도문화원 명의로 「경기도 한국현대사」(2013, 경기도 종합발전실)를 경기도 공무원 교재로 출간했다. 이러한 뉴라이트의 근현대사 인식은 박근혜 집권기에 강화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 기준이나 요강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학술을 내세운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은 수구 세력의 역사 인식이자 정치이데올로기로 전화했다. 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과 이와 연결된 각종 케이블방송은 뉴라이트 계열의 대변지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 정치 얘기가 부득이 등장하는 것도 이들이 정치 활동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일일이 제시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이들이 한국 근현대 백년의 역사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의 여러 주장들이 갖는 함의를 짚어보겠다.³⁾

1. 뉴라이트란 무엇인가

2000년대 들어서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이 자신을 뉴라이트라 부르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 ‘우파’와는 다른 역사성과 내용을 지닌다는 것, 곧 라이트의 새로운 주자로서 자신을 내세웠다. 대체로 이들은 1980년대 또는 1990년대까지 민주화 진영에서 활동하던 학자나 ‘운동권’ 또는 종교인들이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우파로 전환한 인물들이었기에 분명 뿌리는 전통적으로 친일-친미-독재-반공을 주축으로 삼은 과거의 우파와는 구분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좌파’ 또는 진보진영은 스탈린주의와 같은 낡은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인 이명박의 등장을 전후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을 결성했는데, 크게 보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안병직과 그 제자들인 이영훈·김낙년·주익종 등이 주축이 된 낙성대 연구소 그룹이다. 이들은 구 좌파 학자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성장 신화의 역사로 재구성 하면서 그 역사적 근원을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찾고 있다.

두번째 그룹은 과거 진보 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구 운동권’ 출신들이다. 신지호, 하태경 등 이들은 주로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비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서경석목사나 김진홍 목사와 같이 기독교 개통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과거 시민운동이나 빈민사목활동을 하다가 반공을 내세우고 뉴라이트에 합류했다.

이러한 세력들이 모연 만든 전국적인 운동단체가 바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었고 그

3) 이 발표문은 즐고 「우리 내부의 역사 갈등과 과제」(「한민족연구」 제12호, 한민족학회, 2012.12, 89~105쪽)을 기초로 수정·발췌·보충한 것이다. 이들의 논리나 주장이 거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발표문 또한 부득이 이 논문에 크게 의지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관지가 이영훈과 신지호가 맡았던 「시대정신」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아마도 이영훈과 대학 동기인 김문수를 매개로)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 그 하나가 건국절 제정운동과 한국사 역사교과서 개편 시도였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자신의 논리 속에서 친일파들과 이승만·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을 근대화의 선구자나 국부 대통령 또는 근대화혁명으로 추켜 세우면서 수구 정당 내에서 이명박 세력과 경쟁관계에 있던 박근혜 세력 양 진영의 역사 방면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식민지근대화론과 독재자들에 대한 찬양은 과거 수구 세력과 재벌 등에 대한 정당화 구실을 제공하면서 지금은 한국 사회 전체 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라기보다는 내용이나 주장 그리고 결론에서는 ‘도로 라이트’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요컨대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학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은 오늘날 수구세력의 역사 방면 이데올로그로 또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뉴라이트가 한국 근현대사 또는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어떤 모습인가?

2. 뉴라이트의 근현대사 인식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영원성 :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

먼저 이들은 ‘빵과 자유의 경쟁’에서 자본주의(미국)는 사회주의(소련)보다 우월했음이 역사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빵의 경쟁 곧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보다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었음이 미국과 구 소련을 비교하면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자유와 경쟁’에서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구 소련의 프롤레타리아독재보다 훨씬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었으며, 프롤레타리아 1당 독재는 스탈린 개인숭배로 나아가 전체주의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게다가 구 소련은 1917년 혁명 이후 배기 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붕괴되었을 정도로 자생력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완벽한 이상 체제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체제이며 사회주의 붕괴 이후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는 점을 들어,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양적 성장만이 앞으로의 역사 전개과정이라는 것이다. 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는 끝났다」와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식민지 경제사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과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패배’라는 두 시점을 교차하면

서 자신들의 역사상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민족에서 국민으로, 민족주의에서 애국주의로

역사 행위의 주체는 민족이나 시민이 아니라 ‘한국인’(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역사학계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어서’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과장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항일투쟁의 역사 또한 실상보다 과장하고 있다. 또 현행 교과서는 민족을 기준으로 해방 후의 역사를 서술하는 까닭에, (불법국가인) 북한을 민족사의 일부로 대한민국과 병렬 서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며 불량국가(또는 불법국가, 실패한 국가)이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과 별도로 부록이나 외전형식으로 떼어내어야 한다. 그 내용 또한 북한의 일인 독재나 인권 유린 그리고 호전성과 파멸적인 생활상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북한의 실패한 역사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우위와 정통성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수탈은 없었다. 근대화의 과정이자 출발이다

•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억압은 과장되었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일제 식민통치 당국은 조선인을 경제외적으로 수탈한 바가 없다. 일제는 자본주의 교환관계에 의해 경제 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⁴⁾ 일제 강점기에 주목할 사실은 자본주의의 전개이며 한국인의 ‘근대화 역량’이 이 시기에 축적된 것이다(수탈 없는 식민지). 일제 식민지 시기는 ‘제국주의의 말발굽과 함께 들어온 서양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축적한 시기’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일제(또는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 등 근대적 소유관계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또 일제는 각종 근대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항만 등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했으며, 교육기관을 확대해 근대 교육을 받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다.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 통치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근대 국가 운영의 경험과 능력’을 축적했고, 이는 해방 후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친일이라는 과오보다는 근대화 역량을 축적하고 이후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이들의 ‘공’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4) 이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 받았던 1938년부터 1945년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를 전쟁에 기인한 ‘예외적 시기’로 보고 있다.

• 일제의 근대화 시책과 식민지 시기 한국인의 근대 역량 구축은 해방 후 한국 고도 경제성장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물적 인프라스트럭처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은 박정희 집권기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건국대통령·한국의 조지 워싱턴(국부론)

• 이승만 대통령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의 나침반을 돌려놓은 ‘국부(건국의 아버지)’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어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의 끔직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국가로 만들어 ‘운명의 나침반’을 돌려놓은 위인 ‘분단·독재·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부로 추앙해야 한다.

박정희 = 근대화혁명가

•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런데 산업화 없이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 박정희 정권기에는 절대 빈곤이어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보다 선결과제였다.

그런데 산업화 없이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 박정희 정권기에는 절대 빈곤이어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보다 선결과제였다. 박정희가 집권할 무렵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 선 경제성장 후 민주화 전략을 택했다. 쉽게 말해 ‘빵과 자유, 또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양자택일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나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조국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근대화 혁명가’로 기념해야 한다. 5·16은 군사정변이지만 그 내용은 제3세계(또는 후진국)의 근대화 혁명의 출발이다. 한편 이들은 유신체제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베트남의 ‘적화’와에 따른 안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산업화와 민주화

박정희 집권기의 산업화가 성공함으로써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1987년 중산층의 정치적 욕구가 분출한 것이 직선제 쟁취 투쟁이다. 6·29선언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87년체제론). 결국 산업화가 민주화의 기반이자 동력이 되었다.

민주화의 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화 시기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자처한 좌익 세력들의 발호 또는 파업 등은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저해 요인이기도 했다.⁵⁾ 6·29 선언 이후 민주화운동, 노농운동 등은 오히려 민주화의 걸림돌로 파악한다.

일본과 미국

•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제 협력관계를 잘 활용한 덕분이다. 전근대에는 중국 중심의 질서에, 20세기 전반기에는 일본 중심의 국제 질서에, 20세기 후반에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잘 적응한 것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앞으로도 한미일 공조에 입각한 국제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유일정통론=흡수통일론

북한이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실패한 것은 공산주의를 채택한 때문이다(불량국가, 실패한 국가, 악의축). 남북 체제의 장점을 살린 제3의 체제로서의 통일국가 건설은 불가하다. 대한민국 유일 정통성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

건국절과 어버이 이데올로기

“누군가 나에게 20세가 단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않고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하겠다.”(이영훈)

1945년 8·15일 광복절 대신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날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날을 광복절(1945년 8월 15일) 대신 건국절로 추가 지정해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한다.

• 이제 풍요를 누리는 어린 세대들에게 이 풍요가 탁월한 지도자와 유능한 관료와 도전 정신에 넘치는 기업인들 그리고 이름없는 보통 사람들의 땀과 눈물에 의해 이룩된 것임으로 교과서를 통해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어버이세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5)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과 재벌 그리고 엘리트 관료들을 ‘산업화 세력’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산업화를 성공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독재자가 곧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된다.

교과서 탈환 : 현행 (한)국사교과서 = ‘자학사관’으로 비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유능한 관료 도전정신에 넘치는 기업가 그리고 이름없는 보통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성취이다.

그럼에도 좌경세력의 영향 아래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로만 서술하는 자학사관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애국심이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졌다.

이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 긍지를 갖게 하고(교과서 탈환, 애국심 고취) 이러한 성과를 이룬 아버지세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아버지 이데올로기)

3. ‘식민지근대화론’의 왜곡된 역사 인식

식민지근대화론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은 이영훈 교수가 직접 집필을 맡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 2008, 이하 「대안교과서」라 함)에 각 분야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뉴라이트 계열이 국민 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역사교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대안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체제”에 입각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한국인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자신들의 ‘대안교과서’를 대중들이 받아들여야 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이들의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민족 차별과 폭력적 억압의 실상 대신 일제 식민통치의 근대적 효과와 그 성과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제국주의 시혜론’에 입각해 식민지시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안교과서」 관계자들은 현행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실상에 대해 지나치게 민족적 편견에 입각해 서술하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그 결과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식민지시기 일제의 수탈이나 항일운동을 과장해서 서술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식민지기를 식민통치자들의 근대화 정책과 조선인들의 주체적 근대 적응에 의해 ‘근대화의 역량이 구축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식민지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으며, 일제 식민통치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한국인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서술 내용 또한 항일운동이나 일제의 수탈보다는 그러한 근대화의 여러 양상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시기 구축된 물질·인적 인프라가 해방 후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일제 식민지 기를 ‘수탈과 저항’이라는 등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 시기를 근대 문명이 축적되던 시기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법치의 이식?

이들은 일본 식민통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관념이 이식되었고 법과 문명이 제도화되었다고 한다.⁶⁾ 그러나 당시 일본의 메이지헌법(구헌법)과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비교해보자.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가?

〈메이지헌법〉

-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 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이 정한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 3조 천황은 신성(神聖)으로서 침범할 수 없다.

통치의 대권은 천황이 조종(祖宗)으로부터 받아 자손에게 전한다.

6) 아래 내용을 참조.

“오늘날 한국 현대 문명의 제도적 기초가 그 과정 (일제 식민지 지배기 - 필자)에 뒤얽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96 쪽; “요컨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슬슬 근대 문명의 사회로 바뀌었다. 일본 역시 서유럽으로부터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국가이다. 그 근대문명의 법과 제도가 일본의 지배를 통해 한국으로 이식되었다. 근대 문명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다. ... 대한민국은 그러한 ‘문명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새로운 문명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이다.” (『경기도 현대사』 2013, 49 쪽)

입법, 행정 백규(百揆)의 일은 무릇 국가가 임어해서 신민을 진무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로서 지존이 모두 그 강령을 쥐지 않음이 없다. 비유하자면 인신에 사지백해(四支百骸)가 있고 정신(精神)의 경락(經絡)은 모두 그 본원을 수뇌(首腦)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교주(校註), 『헌법의해(憲法義解)』

〈1919. 4. 11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으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⁷⁾

수탈은 없었다. 교환만 있을 뿐이다

‘대안교과서’의 필자들은 현행 교과서는 일제가 식민지 민중에 대해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민족적 편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예컨대 이들은 일제가 ‘민사령(民事令)’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존엄과 자유로운 행위 그리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조선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고 주장한다.⁸⁾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 당국의 공권력에 기초한 폭력적 수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자본주의 경제의 교환관계 즉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교환을 통한 부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⁹⁾ 또 일제는 식민지에 막대한 투자(개발 또는 근대화)를 했지만, 식민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는 이익 대신 손해를 보았다는 놀라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한국인의 ‘우수성’) 일제의 근대화 시책에

7) 여성의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또한 일본은 패전 후인 1945년 미군정에 의해 최초로 인정되어 보통선거제 실현되었다.

8) 다음 서술을 참조하라. “근대 민법의 기원은 프랑스 민법으로서 … 기본 정신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간은 국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법적으로 보장함에 있다…… 민사령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포하였지만, 한국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하였다. 이처럼 민사령을 통해 한국인도 근대적 사권의 주체가 되었다.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84쪽)

9) 그 대표적인 예로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을 들고 있다.

힘입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일제의 정책에 잘 적응해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적 기초-근대화 역량 축적-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 시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량아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던 ‘대한민국의 임신기간’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일제의 식민지 개발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이들은 일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근대화를 촉진시켰고, 일제 강점기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가 박정희정권시기 고도성장의 역사적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일제강점기의 농업개발, 공업개발, 조선인 인적자본의 형성 등에서 일제 강점기 ‘개발’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면, 즉 경제개발의 과실이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를 분석해보면 실상은 “개발 없는 개발”에 지나지 않았다.¹⁰⁾ 일제의 조선개발은 조선 땅위에서 이루어진 개발이었음에도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이었고, 한국인에게는 전혀 그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다. 8·15 해방 이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 성장의 유산이란 것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조차도 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해 거의 소멸되었다. 오늘날 한국 경제 성장이 일제의 개발의 성과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다.¹¹⁾ 교과서포럼은 일제식민지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 강점기의 경제성장을 일면적으로 높이 평가하여 사실상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기본 관계마저 외면했다.

근대 교육을 통해 문맹인에서 문명인으로 전환?

뉴라이트는 일제가 조선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 다른 어느 제국주의보다도 식민지에 근대문명을 이식하는 데 열심이었다고 강변한다. 일제에 의해 초등교육의 기회가 널리 보급되었고, 근대 학술이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사조가 도입되었으며, 경성제국대학교 같은 최고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점

10)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2005) 참조

11) 일제강점기 뉴라이트의 경제성장론에 기초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은 허수열의 역저,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2005)을 참조하라.

하는 조선인들에게는 초급교육의 기회만이 간신히 부여되었으며, 상급학교에로의 진학은 한층도 안되는 일본인 학생의 몫이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는다.¹²⁾ 식민지의 최고 학부인 경성제국대학 또한 조선인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지식청년들에게 제국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설립된 배경을 생략하였다. 게다가 경성제대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학비율은 제한되어 언제나 일본인 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1937년 이후 초등학교는 사실상 어린 조선인 학생들을 조기에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전쟁의 총알받이로 끌고 가기 위한 조선인 징병제 계획과 맞물려 운영되었다.¹³⁾ 단지 학교의 증설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시각

이들이 일제 식민통치마저 미화하는 마당에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파에 대해서 이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서술하기란 난망하다 하겠다. 실제로 ‘대안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 친일행위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의 조선인들의 실천 활동으로 해석할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지식인·관료·자본가 계층의 친일 행위를,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잘 적응해 근대적 능력을 배양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근대화 선구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친일파들이야말로 미래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준비한 우량아들인 것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식민지 시기 ‘항일은 독립쟁취, 친일은 건국 역량준비’라는 기괴한 도식이 성립한다.¹⁴⁾ 서로 적대 개념인 항일과 친일이 둘 다 국가 건설을 위한 ‘애국 활동’이 된다. 사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근대화·경제성장=문명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

12) 박찬승,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매몰된 식민지 시기 서술」,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122-128쪽 참조
 13) 일제의 학교 증설과 의무교육 추진이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함께 입안했다. 이는, 조선 아동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철저히 황국신민화시키기 위한 ‘투자’였다(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이형량 역, 일조각, 1997)
 14) 친일기업인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자”(99쪽)로서 “불리한 여건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수완을 발휘”(100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만주국 명예총영사이자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연수(김성수의 동생)가 사장을 지낸 경성방직 또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해방 후 한국경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근대화 지상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총독부 관료로 근무한 일들은 근대 국가의 운영 경험을 쌓은 것이 되며, 박정희와 같은 친일 군인들은 6·25전쟁 때 북한 인민군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이 시기 습득한 것이 된다.

고 역사 사실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항일이나 친일이라는 개념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시기를 경제성장과 조선인 생활이 향상되었다는 보는 한, 이들의 입장에서 항일운동은 근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제가 ‘문명화’에 쓸 비용을 ‘항일세력’이 꽤심하게도 소모했으니, 사실상 ‘근대문명화’의 비용손실일 수밖에 없다. 실제 ‘뉴라이트의 대부’라는 안병직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유력의 극우 일간지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은 (경제상 비용 손실만 초래하여-인용자) 산업화·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법이 일제식민지시기라고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들은 일제말 전시체제 아래 국내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친일로 돌아섰음을 강조한다. 보통의 조선인들도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했다고 서술했다. 일제에 적극 협력해 전쟁 동원에 앞장선 친일파들과, 일제의 물자 수탈과 인력 수탈의 대상이 된 일반 조선인들 모두 일제의 침략 전쟁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가해와 피해의 영역을 섞어 버렸다. 공공연히 협력자로 나서지 않은 애국지사들은 식민지 말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즉 굴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132쪽). 일제말 수많은 항일비밀결사들이 저항운동을 했으며, 건국동맹이 최후까지 활동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⁵⁾

‘대안교과서’ 필자들은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체제기를 조선인에게 기회의 온 시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들이 전장에 나가면서 유학과 진학의 기회가 넓어져 조선인 학생들이 다투어 진학했다고 했다. 하급직의 일본인 관료와 회사원이 징집되면서 그 빈 자리를 조선인이 이어받았다고 했다. 상공업자들은 1943년까지 계속된 전시경제의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했다(132쪽). 요컨대 일본인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기간 조선인에게는 오히려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논지이다. 이것을 뉴라이트 필자들은 “광기 어린 전시체제”라고 했다. 최근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아예 전시체제기를 강제 동원은 없었고, 전장터에 나간 일본인을 대신해 직장에서 상승의 기회를 얻었고, 일본이나 해외에 취업해 소득 증대의 기회를 얻은 시기로 묘사하는 지경에 이르

15) 일제 말 저항운동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변은진, 「日帝 戰時파시즘期(1937-45) 朝鮮民衆의 現實認識과 抵抗」(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렸다. 어저면 이들에게 전시 총동원체제는 1970년대 이른바 '중동 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

맺음말

이영훈 등이 펴낸 「반일종족주의」는 그 내용의 허황함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¹⁶⁾

한국의 한일과거사 청산을 '반일종족주의'에 의한 광기로 치부하며 나아가 일제의 수탈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근대화의 기초가 닦였고(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식민지시혜론)이 과거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감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책이 지식층에 널리 보급되어 일정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언론과 교수사회나 공직자들 일부도 이 책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시민·학생·공직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마치 일본의 우익들의 주장이 우익 언론과 우익 정당과 연결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한일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 전면 충돌하는 시점에 일본의 극우지 「문예춘추」는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 바야흐로 과거 친일 세력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맺었던 어검은 네트워크가 21세기에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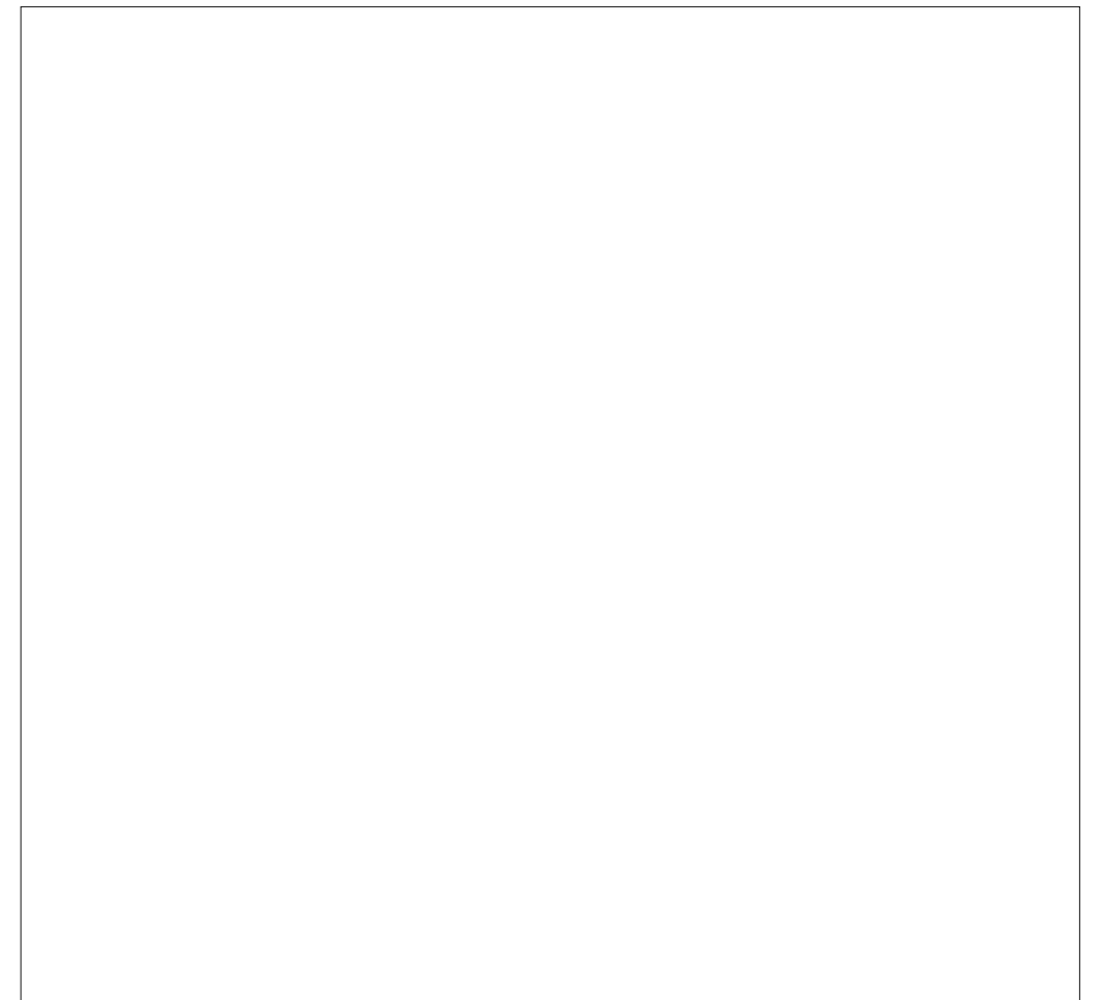
16) 이 책은 1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실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출판증사자의 비공식적인 지적이 있다.

자료로 보는 강제동원 피해 실상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자료로 보는 강제동원 피해 실상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발표2

미국의 전후 재편과 미완의 한일 과거사

박태균(서울대)

한중일은 '일의대수', '일위수'를 사이에 둔 이웃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역사문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치우스제(邱士杰, 사면대학)

미국의 전후 재편과 한일과거사

박태균(서울대)

미국의 전후 재편과 한일과거사

박태균(서울대)

1. 1945년의 관점에서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루즈벨트는 원래 대서양 헌장 제3조에 있는 민족자결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물론 당시 모든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전후 구상 관련 논의를 보면 만주와 한국을 중국에 반환하거나 독립시키기보다는 일본의 주도권하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후 중국과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한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전후 구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¹⁾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과 전후 만주, 한국, 타이완, 인도차이나에 관해 논의하면서 인도차이나에는 신탁통치를, 만주와 타이완은 중국에 반환하며, 한국은 미국, 중국 외에 1~2개 나라가 더 참여하는 국제신탁통치하에 두자고 제안했다.²⁾

아시아에서 전범국가인 일본에 대한 처리는 유럽과는 달랐다. 유럽에서는 전범 국가들을 분할점령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4개국 - 미국, 소련, 영

1) 안소영,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전후 대일 대한정책 및 점령통치 구상: 이중적 대립축과 그 전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집 2호, 2010, 171쪽

2)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 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호, 2014, 314쪽

국, 프랑스 - 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범국가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들에 의해 미래에 또 다른 무력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범국의 제국(empire)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의 CFR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권익에 중국이나 소련이 위협요인이 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군국주의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군대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 일본 제국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분할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일본 제국의 분할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에서 배타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1945년 8월 15일은 카이로 선언에 있는 말 그대로 “become free and independent”를 의미했다. 그것은 독립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 제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제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제스의 역할과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은 카이로선언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전후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약속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적절한 시기’가 신탁통치안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지만,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후 처리방식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복을 접수한다는 것이 곧 한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즉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점은 한국의 독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이었다. 특히 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중국의 임시정부 승인 정책에 대해 일면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식민지 지역들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었다.

3) 안소영, 위의 글, 172쪽

이 점은 일반명령 1호 1절 f항에서는 항복을 받아야 할 행위자를 연합군 사령관들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유일한(only)’ 행위자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일본을 대상으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일본이 점령했거나 식민지화했던 아시아 국가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전쟁에 협조했던 사람들(collaborator)이 아니라 반일투쟁을 전개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던 점령지역에서의 사회적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현지인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복을 받기 위해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으로 반환되는 영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본 점령 지역이 이전에 식민지였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구식민지 지역에는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연합군 군대가 진주하였고, 이는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에서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곳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던 사실의 연장선에서 일반명령 1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일본의 항복을 받는 지역을 구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 지역에 걸쳐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할하거나 다른 나라 사령관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명령 1호에 의하면 미군이 온전히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지역은 일본의 주요 4개 섬과 부속도서, 필리핀이었다. 이 지역 외에 미국이 항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은 38선 이남의 한반도였고,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군의 남진을 멈추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명령 1호에서 나타난 미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1950년 1월의 애치슨 연설에서 재확인되었다. 미국은 스스로의 생명선(vital line)을 일본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했다. 일반명령 1호에서도 일본과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이 직접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지역이었던데 반해 한반도의 반은 소

련군이, 타이완은 중국 국민당이 항복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반도의 경우 더 이상 소련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후술할 신탁통치를 통해 어느 일방에 의한 주도권 장악을 막고자 한 것이었고, 타이완은 카이로 선언에 의거해서 중국에 되돌려줄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일반명령 1호로 이어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삼성조정위원회(SWNCC) 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삼성조정위원회는 1945년 10월 13일, SWNCC 176/3(1945년 9월 1일)과 SWNCC 176/6(1945년 9월 27일)을 수정한 176/8을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에게 보냈다. 이는 한국 점령에 대한 기본지침이었다.⁴⁾ 이 지침은 일본의 항복에서부터 신탁통치체제가 수립될 때까지의 한국에서의 민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제2조는 군사정부의 기본적인 행동범위를 지시하였다. 카이로 선언에 기초하여 한국을 해방된 지역(country)¹⁵⁾으로 다루어야 하며,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와 유엔의 성원으로서 한국의 실질적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민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 그 전제가 되었다.

이 문서의 내부 정치 관련 부분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 독립운동 그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본에 협력한 세력들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과 함께 당시 존재했던 한국 내 정치조직들이 미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활동을 고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만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SWNCC 176/8의 내용은 곧 전술한 바와 같이 카이로 선언의 한국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SWNCC 176/8이 주한 미 군정에 전달된 지 일주일 후인 동년 10월 20일

4)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The Far East(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1073~1091.(이하 'FRUS 1945 Vol. VI'로 약칭)

SWNCC 79/1이 입안되었다.⁵⁾

이 문서는 '한국에서 국제적인 신탁통치제도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미군 행정조직의 구조와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사적 점령은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at the earliest possible date)'에 한국을 위한 신탁통치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미국 정부는 만약 한국에 대한 열강들의 합의와 신탁통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⁶⁾

1945년 10월 24일 삼성조정위원회는 신탁통치 실시와 관련된 101/4 문서를 다시 승인했다. 이 문서에서는 일본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미 군정을 빨리 해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결론으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유엔 헌장 79조와 81조에 의해 '신탁통치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략적 지역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as trust territory, no part of this territory should be designated as a strategic area)'는 점이 명시되었다. 유엔 헌장에 의거한 신탁통치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선언과 함께 1947년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던 정책의 기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했는데, 신탁통치나 유엔을 통한 정부 수립 등이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신탁통치에 의해 설립되는 행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의 진전 상황을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는데,⁷⁾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유엔임시조선위원단(UNTCOK)의 감시하에서 수립되었고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받은 직후 유엔한국위원단(UNCOK)이 조직되어 매년 유엔총회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 조직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역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5) FRUS1945 Vol. VI, p.1093.

6) FRUS1945 Vol. VI, p.1099.

7) FRUS1945 Vol. VI, p.1099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1947년에 나온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서 JCS 1769/1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1947년 4월 29일

3. 이념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 원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다.
4. 미국의 방어진역은 대략 태평양에서는 알래스카에서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이며, 대서양에서는 그린란드에서 브라질, 파타고니아 지역이다. 구세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위의 방어진역보다 더 높다. 그런데 군수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5. 이념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서양 지역이 가장 공격받기 쉽다. 프랑스와 영국을 독립된 상태로의 유지와 미국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지원할 경제력의 유지가 전 서반구의 안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에도 첫 번째로 중요하다.
6. 독일경제, 특히 석탄채굴은 프랑스의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다. 독일경제의 회복은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

(중략)

16. 태평양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의 방어진역이다.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지난 2년 동안 이념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은 미국의 명예와 세계의 안전에 크게 해롭다. 이 전투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자원을 검토해 볼 때 모든 전선을 방어하기가 어렵고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에서의 원조를 위하여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를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러한 의심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우리의 명예는 높아질 것이다.
17. 한국에 대한 원조는, 여타의 중요한 나라들에 원조가 주어진 후 자원이 남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19. 일본은 이념전쟁이 일어날 경우,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은 극동에서 이념적 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앞으로의 전쟁이 이념전쟁

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군사잠재력의 회복을 위한 미국의 원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우리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른 원조 순서
(1)영국 (2)프랑스 (3)독일 (4)벨기에 (5)네덜란드 (6)오스트리아 (7)이탈리아 (8) 캐나다 (9)터키 (10)그리스 (11)라틴아메리카 (12)스페인 (13)일본 (14)중국 (15)한국 (16)필리핀
32.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념전쟁이 발생할 경우 원조는 미국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나라들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과 원조의 긴급성을 종합하여 순서를 매기면 다음과 같다. (1)영국 (2)프랑스 (3)독일 (4)이탈리아 (5)그리스 (6)터키 (7)오스트리아 (8)일본 (9)벨기에 (10)네덜란드 (11)라틴아메리카 (12) 스페인 (13)한국 (14)중국 (15)필리핀 (16)캐나다⁸⁾

2. 루즈벨트에서 트루만으로

- 상원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수립을 인정함.
- 트루만은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이 독일뿐만 아니라 소련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했다. 그는 소련의 지도자들을 히틀러와 알카포네에 비견했고, 결국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원자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소련과의 협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 트루만은 1946년 이란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소련과의 협조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트루만의 기본적 생각은 소련을 전체주의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http://www.bbc.co.uk/history/worldwars/wwtwo/truman_01.shtml

8) JCS 1769/1,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p.71~84.

- Les K. Adler and Thomas G. Paterson, "Red Fascism: The Merger of Nazi Germany and Soviet Russia in the American Image of Totalitarianism, 1930's-1950'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5, No. 4 (Apr., 1970), pp. 1046-1064

3. 미국의 실용주의

일본인 기술요원을 활용하여 한반도에 대한 직접 점령은 1944년부터 고려되었던 방안이었다.⁹⁾

국무성은 1945년 8월26일 "대일훈령을 적당히 손질하여 한국에 적용하는 것, 즉 미군정관의 지시하에 조선총독 및 그의 일인 참모진을 한국의 행정에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다.¹⁰⁾

1945년 9월14일 3성조정위원회에서는 일본인의 유입이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기술능력을 이유로 아래 거명된 일본인 관리들의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는 수긍될 수 없다. (중략)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할 때 귀관은 그들을 모든 직무로부터 즉각 해임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베총독, 총독부의 각 국장, 지방 행정관서장 및 지방 경찰간부 나아가서 귀관은 기타의 일본인들 및 한국인 부역관리들의 조속한 새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¹¹⁾

그러나 하지의 정치고문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일본인 관료의 해임은 여론의 견지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추방되겠지만 실제로는 계속 업무를 수행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에겐 아니면 공공단체나 언론기관에겐 하급의 말단 직위 외에는 유능한 한국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인의 비호 하에 고위직에 기용되었던 한국인들은 친일파로 간주되어 대부분이 일본인들 못지 않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¹²⁾

9) 국무성 메모, 1944년 3월29일, FRUS 1944 No. 5, pp. 1225-1242

10) 마닐라 주재 총영사가 국무장관에게, FRUS,

11) 김국태 50쪽

12) 베닝호프 1945년 9월15일 54-56쪽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이론에 투철하고 반공사상에 철저한 유능하고도 실천력이 강한 한인 중에서 애국적 인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 중책을 담당해 나가기가 어려우니 우리 군정을 협력하고 또 한국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하지 중장의 요청이니 심사숙고하여 그와 같은 인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¹³⁾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임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사실 영어란 것이 한국인들 사이에선 사치스러운 것이었던 만큼 이들 인사들과 그 동료들을 자연히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한국인 구성체의 비대의적 성격을 간파했으며 그 구성원의 사회적 기반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중입니다."¹⁴⁾

4. 한일 간의 쟁점에 대한 미국의 방기

1948년 Clifford Stewart Strike 보고서와 Percy Hampton Johnson 보고서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특히 존스톤의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의 경제부흥을 원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는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

1951년 12월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타진하였다. 한국 정부 역시 1952년 3월20일 미 국무성에 평화조약 제4조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상쇄하려고 하는 교섭기술이고 제4조에 대한 견해의 표명은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무성에 권고하였다.

13) 조병욱, 나의 회고록, 149쪽

14) 정치고문 랭던이 국무장관에게, 155쪽

15) 이원덕, 29쪽에서 재인용.

샌프란시스코 4조 (B) 항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의해 행하여진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

NSC 5514에서 미국 정부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를 비롯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단지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상호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¹⁶⁾

1956년 7월 한국 정부가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다. 즉, 동년 9월10일의 답신에서 미 국무부 장관은 양측 간의 차이를 협상하는 것은 두 나라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간단히 언급하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⁷⁾

5. 결론

미국의 딜레마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일 간의 quasi alliance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의 딜레마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대상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때 나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가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 쪽에 기회비용이 더 크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회비용이 크다면 관리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일관계의 오늘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그 기

16) “Progress Report on US Objective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 FRUS 1955-1957, Vol. XXIII, p. 190

17) 맥도날드, 134쪽

원을 만들었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에는 개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지금의 한일 간의 문제는 역사인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인식의 차이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미국의 역할의 변화, 국내 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역할의 강화 등 새로운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 변화가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중일은 ‘일의대수’, ‘일위수’를 사이에 둔 이웃

– 중국인 강제노동 화해 사건에서
‘징용공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日・中・韓は「一衣帯水」、 「一葦水」の間にある隣国

- 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から「徴用工
問題」解決の道を模索する

内田雅敏(弁護士)

한중일은 ‘일의대수’, ‘일위수’를 사이에 둔 이웃

- 중국인 강제노동 화해 사건에서 ‘징용공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머리말

“중일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사이인 이웃나라로, 긴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는 1972년 9월 29일 중일국교정상화를 이뤄낸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중일공동성명 전문의 한 구절입니다.

‘일의대수’ 즉 중일 양국은 하나의 띠와 같은 폭이 좁은 물(바다)를 사이에 둔 만큼 가까우며, 또한 “긴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가진 친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고대시대의 견당사 파견 등,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명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를 본따 중국보다 더 가까운 한일관계는 ‘일위수(一葦水)’ 사이인 이웃나라, 즉 하나의 갈대와 같은 좁은 물(바다)를 사이에 둔 만큼 가깝고 친밀한 나라라는 말로 불립니다. 한국과는 도래인, 사쓰마 도자기의 도공마을, 조선통신사 등 ‘긴 시간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쌓아온 친밀한 이웃나라입니다. 사쓰마번의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주창한 ‘선린우호’라는 단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수는 약 750만명으로, 방일 외국인여행자수 3000만명의 3분의 1을 점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여행자수는 약 300만명으로 자그마치 1000만명의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주재원 생활을 한 전 상사맨인 제 친구는 지금도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밀했던 한일 관계가 한국대법원의 전 징용공판결을 계기로 일본정부

의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그리고 그에 대항한 한국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거부 통보 등등, 단기간 새에 급격히 얼어붙어 방일 한국인 관광객수가 급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한 수출도 격감하였습니다.

제1 하나오카(가지마건설) 화해

많은 분들이 같은 강제동원·강제노역문제임에도 중국인 사례에서는 하나오카(花岡) 화해(가지마건설), 니시마쓰(西松)건설 화해,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화해 등이 있는데, 어째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양자는 불법 노예 노동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만, 기간과 그 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인 강제동원·강제노역의 피해자수는 1944년 9월부터 이듬해인 1945년 8월까지 약 1년간 4만 여명입니다만, 조선인의 사례는 기간도 길고 피해자수도 20만 명~수십만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한국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때에는 이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중국인 강제동원·강제노역 문제와 화해에 의한 ‘부분적 해결’ 성과를 고찰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각의결정 ‘화인(華人) 노무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

일본은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에 의한 중국 평톈(奉天, 지금의 선양) 교외의 철도 파괴(만주사변)를 시작으로, 베이징 교외에서 1937년 7월 7일에 벌어진 루거우차오사건을 거치면서 중일 ‘전쟁’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941년 12월 8일의 진주만공격을 기점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도 전쟁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성인 남성이 잇따라 전쟁에 참전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합니다.

이에 대처하고자 일본 정부는 우선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로부터의 노동력 이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그 형태는 ‘모집’, ‘관 알선’, 후에는 징용령에 따른 노동이었습니

다만, 실태는 ‘다코베야(감금형 숙소·일명 문어방)’에 의한 강제노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대법원 판결도 노예 상태와 진배없던 강제노역의 실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악화하자 일본에서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습니다.

1942년 11월 27일, 당시의 도조 내각은 중국대륙에서 중국인을 일본 국내로 강제로 끌고와 광산, 댐 건설 현장 등에서의 강제노역을 계획하고, ‘화인(華人)노무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을 각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4년 2월 28일의 차관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인 1945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8,935명의 중국인을 일본으로 끌고와 국내의 광산, 댐 건설 현장 등의 135개 사업장에서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강제동원·강제노역은 겉으로는 ‘고용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전투에서 붙잡힌 포로, 점령지 민간인의 마구잡이식 납치 등, 그야말로 강제동원·강제노역 자체였으며 명명백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약 1년 동안 6,830명이 숨졌습니다. 사망률 17.54%입니다.

2. ‘하나오카사건’ —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강제로 끌려온 중국인 중 986명은 아키타현 오다테시 교외의 하나오카광산(구리광산)에 위치했던 가지마구미(鹿島組·가지마건설(주)의 전신) 하나오카출장소에 배치되어 하나오카강의 개수공사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증산 명령 하에 광산 지하를 하나오카강 아래까지 굴착하면서 낙반으로 일본인 광부 11명, 조선인 광부 11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일명 나나쓰다테갱(七ツ館坑)낙반 사고가 발생하자, 추가 굴착을 위해서는 공사를 해서 하나오카강의 흐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식사도 주어지지 않는 채, 옷도 끌려온 때 입던 옷 그대로 차디찬 강속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차례차례 쓰러져 갔습니다.

이러한 노예 노동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그들은 1945년 6월 30일 한밤중에 일본인 지도원 4명 및 일본인과 내통하면서 동포를 괴롭히던 식량 담당 중국인 1명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이른바 ‘하나오카사건’입니다.

이 봉기가 있기까지 이미 137명이 혹사, 학대 속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봉기는 금세 헌병대, 경찰, 현지 경방단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산속으

로 도망쳤습니다만 결국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이 진압 그리고 그 후의 고문으로 100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결국 가지마구미 하나오카출장소에서는 강제로 끌려온 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1년 여 새에 강제동원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률은 무려 42.39%로, 전체 중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사망률 17.54%(이 수치도 높습니다만)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3. 포로수용소장의 보고

폭동의 원인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당시의 센다이포로수용소장은 정보국에 「가지마구미 화인 노무자 폭동상황의 건」이라는 제목의 쇼와 20(1945)년 7월 20일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故) 니시미 다카시(新美隆) 변호사와 필자가 미국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하나오카 폭동’의 원인, 동기로 “원래 10시간 작업임에도 6월 20일부터 현하 일제 돌격작업이라고 칭하고 2시간을 연장해 12시간으로 정했으나 이에 대한 식량의 추가 배급은 없었음”, “식량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배급량이 결코 포만감을 얻을 만큼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가 주식의 일부를 착복한 듯함”, “화인 노무자에게 일반 구입을 금하고 있으니 개인 소지금은 필요 없다며 작년 8월 이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이라며 노무 가중, 식량 부족, 임금 미지불을 기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화인을 마치 마소처럼 다루고 작업 중 정지하면 구타하고, 부대 이동 중에 뒤처지면 구타함. 그들의 생활은 극소량의 식량만 주어진 채 최대의 요구와 구타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이라고 가지마구미 하나오카출장소의 강제노역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 ‘공동발표’에서 책임을 인정하다

중국인 생존자·유족들은 1989년, 가해 기업인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1인당 500만엔(당시 전상병자·전몰자유족 등 원호법에 따른 1인당 총 지급액이 약 500만엔이었던 것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총 50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교섭 끝에 1990년 7월 5일, 가지마건설은 중국인 강제동원·강제노역은 국

책에 따른 것이나, “기업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해당 중국인 생존자 및 유족에게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 청구에 대해서도 쌍방이 대화를 통해 해결에 힘써야 할 문제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제소부터 화해 성립까지

하지만 그 후의 교섭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그에 1995년 6월 28일, 경순(耿諄) 씨 등 11명의 생존자·유족이 대표 소송으로서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1인당 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법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00년 11월 29일에 도쿄지방법판소에서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성립한 화해는 화해조항 제1항에서 1990년 7월 6일, 가지마건설과 중국인수난자연의회(中國人受難者聯誼會)가 연명으로 발표한 위 ‘공동발표’를 재확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지마건설은 강제동원·강제노역에 관하여 “기업으로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화해금으로 5억 엔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2 니시마쓰건설(구 니시마쓰구미) 히로시마 야스노(安野)재판, 화해에

1. 2004년 7월 9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스즈키 사토시(鈴木敏之) 재판장, 마쓰이(松井千鶴子) 판사, 구도 료지(工藤涼二) 판사)는 히로시마지방법판소가 인정한 피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①니시마쓰건설이 강제로 끌려온 중국인들에게 가혹한 생활을 강요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중국인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고통을 겪고 있는 데에 반하여 니시마쓰건설은 국가 보상금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볼 때, 니시마쓰건설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며 손해배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고 도리에 어긋나므로, 니시마쓰건설의 소멸시효 원용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

용될 수 없다.

고 하며 원고 피해자·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니시마쓰건설에 피해자·유족들에게 각 55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니시마쓰건설의 상고를 수리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2007년 4월 27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가 인정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그대로 답습한 다음,

“앞에서 본 사실 관계를 감안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지극히 큰 것이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1972년 9월 29일의 ‘중일공동성명’ 제5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해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일전쟁 수행 중에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 혹은 법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 제5항에 의하여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청구권에 근거한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위 항에 근거한 청구권 포기의 항변이 주장된 때에는 해당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중일공동성명 제5항에 의해 포기되었으므로 재판을 소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권리 자체를 상실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판결 끝머리에 붙인 ‘방론’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방론’에서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서 임의로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 상고인(니시마쓰건설·필자 주)은 전술한 바와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켜 나름대로의 이익을 얻었고 더욱이 앞서 본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고재판소의 패

소 판결 이후, 2009년 10월 23일에 니시마쓰건설과 중국인 피해자·유족들 사이에는 ‘방론’에 근거하여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3. 화해사업의 전개

화해가 성립하고 1년 후인 2010년 10월 23일, 히로시마현 북서부 산간지에 자리한 아키오타초(安芸太田町) 야스노에서 중국에서 온 생존자 5명을 포함한 피해자·유족들 48명과 중국대사관 직원, 국내외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국인 니시마쓰건설 강제연행·강제노동 수난자 추도식과 기념비의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중국인 피해자·유족과 가해자인 니시마쓰주식회사는 연명으로 ‘야스노 중국인 수난 지비’를 건립하고 비 뒷면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아래의 글귀를 새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42년의 각의 결정에 따라 약 4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각지로 강제로 끌고와 고된 노동을 강요했다. 히로시마현 북부에서는 니시마쓰구미(현 니시마쓰건설)이 시행한 야스노발전소건설공사에서 360명의 중국인이 가혹한 노역에 종사하다 원폭에 의한 피폭사까지 포함해 29명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1993년 이후 중국인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인간 존엄의 복권을 요구하며 일본 시민단체의 협력을 받아 니시마쓰건설에 사실 인정과 사죄, 후세 교육을 위한 기념비 건립, 응당한 보상이라는 세 항목을 요구해 왔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교섭과 재판을 거쳐 2009년 10월 23일에 360명에 대한 화해가 성립하여 쌍방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니시마쓰건설은 최고재판소판결(2007년)의 방론에 입각하여 중국인 피해자의 요구와 마주해 기업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니시마쓰로 탈바꿈하겠다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

오타강(太田川) 상류에 위치하며 도이(土居)에서 가쿠사(香草)·쓰나미(津浪)·쓰노보(坪野)에 이르는 긴 도수터널을 갖춘 야스노발전소는 지금도 조용히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중일 양국의 자자손손의 우호를 염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

2010년 10월 23일
야스노·중국인 수난자 및 유족
니시마쓰건설회사

이 비는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 양 옆에는 피해자 360명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가 서 있습니다.

이 비는 이 지역 아키토타초, 주고쿠전력 등 각 방면의 협력 하에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에 열린 제10회(중간에 가급적 일찍 일본을 찾고 싶다고 희망한 유족을 초대할 목적으로 봄·가을 연 2회 개최한 해도 있었다) 추도식에 이르기까지, '니시마쓰야스노우호기금운영위원회'(중국 측, 일본 측 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니시마쓰건설도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된 248명의 피해자·유족들(360명 중 약 69%)에게 보상금을 전달하고, 희망자 199명의 피해자·유족을 순차적으로 추도식에 초대해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방일한 피해자·유족들은 매번 추도식이 끝난 후 강제 노동의 현장을 둘러보고 새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당시를 떠올립니다. 더불어 이튿날에는 원폭자료관을 견학하고 원폭피해의 참상을 머리로나마 이해하고 위령비에 헌화해 주었습니다. 원폭자료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인 히로시마시민평화가이드가 안내역을 맡고 있는데, 이 중에는 히로시마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도 있습니다.

그는 원폭자료관뿐만 아니라 추도식에 참석한 중국인 피해자·유족의 통역사로 꼭 수행해 주었습니다.

추도식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연출되었습니다.

당시 건설한 발전소가 지금도 가동 중인 사실을 안 한 유족이 “아버지가 만든 이 발전소를 앞으로도 꼭 사용해 달라”고 안내를 맡은 주고쿠전력 담당자에게 말하자, 담당자는 곧바로 “네,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보고집회 등에서 새삼스럽게 나온 화제가 아닌 안내 도중에 유족이 던지시 주고쿠전력 사원에게 말했고 그 대화를 이런 일이 있었다며 동행한 필자에게 슬쩍 가르쳐 준 에피소드입니다.

원폭자료관을 견학한 한 유족은 그 날 밤의 교류집회에서 “소감은 세 가지다. 처참하다, 처참하다, 처참하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9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때에 난징에서, 충칭에서, 싱가포르에서, 그 밖의 아시아 각지에서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패했다! 아시아는 해방되었다!”고.

그 만세를 부르짖은 사람들의 자녀, 손자가 원폭자료관을 견학하고 “처참하다, 처참하다, 처참하다”고 소감을 밝힌 셈입니다.

화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추도식, 원폭자료관 견학 등의 활동은 풀뿌리 차원의

중일우호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때 마침내 ‘수난의 비’는 ‘우호의 비’가 되겠죠”라는 어느 피해자 유족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한다.” 반복입니다만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용’과 가해자의 ‘절도’ ‘진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가해 사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제3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 이는 2016년 6월 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미쓰비시머터리얼社 중국인 강제동원·강제노역 사건 화해에서 이 회사의 기무라 히카루(木村光) 업무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해 중국인 피해자·유족들의 대표인 염옥성(閻玉成·86세), 장의덕(張義德·88세), 함순(闕順·95세, 따님이 대리출석) 등, 생존 피해자에게 발표한 ‘사죄문’의 한 구절이다.

생존 피해자들은 이 회사의 “사죄를 성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화해서 제1조), “우리는 중국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주도한 일본정부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가해 기업이 여전히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사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쓰비시머터리얼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인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염옥성 씨는 “화해가 성립되어 기쁘다. 미래로 눈을 돌리고 (일본 측과)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머터리얼은 ‘사죄문’에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 ‘화인 노무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에 의거해 약 39,0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로 끌려왔다. 당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와 그 하청회사(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자회사의 하청회사를 포함한다)는 그 중 일부인 3,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사업소에 수용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강요했다. 또한 그 사이 722명의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숨졌다. 본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해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당사는 이처럼 중국인 노동자분들의 인권이 침해당한 역사적 사실을 솔직하고도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

또한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조국이나 가족과 떨어진 이국 만리 타향에서 중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당사는 당시의 사용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중국인 노동자 및 그 유족분들께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 돌아가신 중국인 노동자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전의 과오를 잊지 않고 뒷날의 경계로 삼는다.” 당사는 위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향후 중일양국의 우호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 아래, 본건의 중국적·포괄적 해결을 위해 설립될 중국인 노동자 및 그 유족을 위한 기금에 금원을 각출한다[화해합의서 제1조(사죄)].

제4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를 둘러싼 신문, TV 등 언론의 평가

2016년 6월 1일에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가 체결되자, 각 언론은 같은 날 저녁의 TV 뉴스, 신문 석간, 이튿날의 조간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신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을 제외하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닛케이 등의 전국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현에 걸친 블록지, 지역지까지 일제히 화해를 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신문의 사설 제목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다하는 화해’(6월 3일 마이니치신문)

‘과거를 직시한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6월 3일 닛케이신문)

‘중국인 강제동원 의미 있는 화해의 결단’(6월 6일 아사히신문)

‘중국인 강제동원 화해 풍화에 맞서는 노력도 필요’(6월 3일 가호쿠신보)

‘강제동원 화해 평가할 만한 역사적 합의’(○월 ○일 니시닛폰신문)

‘강제동원 화해 가해와 마주하는 자세야말로’(6월 3일 시나노마이니치신문)

‘전후처리 가속화의 계기로 강제동원 화해’(6월 7일 나가사키신문)

이 중 ‘역사의 책임을 다하는 화해’라는 제목을 단 마이니치신문의 사설이 이 문제를 둘러싼 화해의 경과를 복기한 뒤 서술하고 있어 가장 명쾌합니다.

…… 전쟁 말기, 가혹한 노동 상황에 견디다 못한 중국인 노동자가 봉기해 탄압당한 아키타의 하나오카사건을 둘러싸고 2000년의 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피해자와 가지마(구 가지마구미)의 화해가 성립했다.

2009년에는 히로시마현에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니시마쓰건설의 화해도 실현되었다. 니시마쓰건설의 화해는 2007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 국민의 배상 청구권은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잃었다”고 첫 판단을 내리고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강제동원의 사실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정하고 이 회사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머터리얼은 작년 구 미쓰비시탄광의 광산에서 미국인 포로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포로에게 사죄하는 등, 역사 청산을 위해 움직였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완전히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따른 화해는 최고재판소가 요구하는 ‘피해 구제’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화해에서 미쓰비시머터리얼은 역사적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기금이나 기념비의 설치 외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의 소재 조사에도 협력한다. 전원과의 화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나, 화해를 수용한 피해자는 회사의 자세를 평가하고 있다. 성의는 다른 중국인들에게도 전해질 터이다. ……

이처럼 화해를 환영하는 논조에 반해, 2016년 6월 6일자 요미우리신문은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 모습을 바꾼 중국의 흔들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과 배상청구 움직임이 중국에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5일자 산케이신문도 ‘주장’에서 “미쓰비시머터리얼 ‘화해’ 정부는 용인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민간의 문제’라며 이를 용인하는 듯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전후보상문제는 개인 보상을 포함해 법적으로 해결된 상황이다. 이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시점이 온전히 빠져 있습니다.

寄稿

内田 雅敏 (弁護士、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委員長)

「受難の碑」を「友好の碑」に

広島で中国人強制連行・労働受難者追悼式

10月20日、広島県安芸太田町安野で、中国からの受難者遺族18名を迎え、第5回西松建設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受難者追悼式が行われた。

第二次世界大戦末期、国内の労働力不足に対処するため、閣議決定を経て、約4万人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鉱山、土建、港湾荷役などの現場で強制労働をさせた。安野の地でも360名の中国人が西松組(当時)のもと、安野発電所建設工事に従事させられ、過酷な労働によって、被爆死5名を含む29名の方々が異国の地で亡くなった。

中国人受難者・遺族らは地元広島を中心とする日本側支援者らの協力を



「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前で行われた第5回追悼式
筆者提供

得、16年間に及ぶ交渉と、翌年10月23日、中国電力「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一角に、中国電力が設立された。

10月23日に西松建設との「中国人受難者・遺族と西松建設株式会社」の連名で、

「いただきます」と答えた野において、盛大に祝われるはずであった。今回の追悼式にも、当初三十数名の中国人受難者遺族が参加の予定であったところ、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の領有をめぐる日中間の緊張の中で、「日本に行くのが怖い」として十数名が、来日を取りやめた。

このような時こそ、日中の民間人同士の交流が大事である。関係者の尽力により、八太田川上流に位置し、長い導水トンネルを持つ安野発電所は、今も静かに電気を送り続けている。こうした歴史を心に刻み、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この碑を建立する。この碑を建立する。この碑を建立する。

5回にわたる追悼式では、さまざまなエピソードもあった。当時の発電所が現在も稼働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遺族の一人が「父たちの造ったこの発電所を、未永く使ってほしい」と、案内の中国電力担当者に話しかけたところ、担当者が即座に「はい、大事に使わせて

今年、日中友好協力の関係のさらなる発展に寄与せんことを」とあいさつした。

記念碑建立には、敷地を提供した中国電力そして地元安芸太田町などの協力があつた。

記念碑は、建立だけでは完結しない。維持管理を通じて和解の精神を若い世代に伝える作業が不可欠だ。中国人受難者・遺族らの西松建設に対する賠償請求を支えた「西松建設裁判を支援する会」は、「歴史事実を継承する会」は、発展的解消をした。中国電力の現場責任者は、遺族の一人から「父たちが作った発電所を未永く使ってください」と話しかけられ、「大事に使います」と答えたという。こうした積み重ねによって、「受難の碑」は「友好の碑」となるだろう。

翌日、中国人受難者らは広島市の原爆資料館を訪れた。尖閣諸島問題を契機として日中双方の若者の間に愛国という「正義」のぶつけ合いと憎しみが醸し出されつつある現在、草の根の交流の大切さを痛感する。(うただ・まさとし) 弁護士、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委員長

文化

日中真の戦後和解へ

強制連行の加害と受難刻み「記念碑」

昨年10月23日、西松建設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について中国人受難者・遺族と西松建設の間で、同社が加害の事実、及びその歴史的责任を認め、謝罪し、補償金を支払うという和解が成立した。和解成立1周年を迎えた今年10月23日、生存者

5名を含む中国人受難者・遺族ら40名及び中国大使館員ら、国内外から多くの関係者の参列を得て、広島県西北部の山あいの地、中国電力安野発電所の一角で、二胡の音色が静かに流れるなか、慰霊式と記念碑の除幕式が行われた。

除幕された「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には、受難者及び遺族と西松建設の連名により日本語と中国語で次のような碑文が刻まれた。

「第二次世界大戦末期、日本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略)約4万人の中国人を日本の各地に強制連行し苦役を強いた。(略)安野発電所建設工事で360名の中国人が苛酷な労働に従事させられ、原爆による被爆死も含め、29人が異郷で生命を失った(略)」

「中国人受難者は被害の回復と人間の尊厳の復権を



内田 雅敏

和解を象徴するものだ。「和解」という語を『広辞苑』で引くと、①相互の意思がやわらいで、とげあうこと、なかなかおき、②(法)争いをしている当事者が互いに譲歩しあつて、その間の争いを止めることを約する契約。示談とある。

裁判上の和解は②の意味だ。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歴史の清算の問題であり、その和解は、限りなく①に近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加害者と被害者の連名による記念碑の建立で、①の意味での和解に近いわけである。

除幕式で生存者の邵義誠氏は「故郷を遠く離れ、祖国を遠く離れた異国の地に、かつて強制連行され非人間的な労働を強いられた地に、ついに真実の歴史を刻んだ記念碑が建立されました。敢然と歴史的责任を認めて実際の行動で謝罪した新生西松建設に敬意を表します」と述べた。

西松建設も「改めてその歴史的责任を認識し、安野における360名の受難者およびその遺族に対して深甚なる謝罪の意を表明致し、『安野 中国人受難



邵義誠さん(右から)自ららが除幕した「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一角に、中国電力が設立された。

10月23日に西松建設との「中国人受難者・遺族と西松建設株式会社」の連名で、

「いただきます」と答えた野において、盛大に祝われるはずであった。今回の追悼式にも、当初三十数名の中国人受難者遺族が参加の予定であったところ、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の領有をめぐる日中間の緊張の中で、「日本に行くのが怖い」として十数名が、来日を取りやめた。

このような時こそ、日中の民間人同士の交流が大事である。関係者の尽力により、八太田川上流に位置し、長い導水トンネルを持つ安野発電所は、今も静かに電気を送り続けている。こうした歴史を心に刻み、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この碑を建立する。この碑を建立する。

今年、日中友好協力の関係のさらなる発展に寄与せんことを」とあいさつした。

記念碑建立には、敷地を提供した中国電力そして地元安芸太田町などの協力があつた。

記念碑は、建立だけでは完結しない。維持管理を通じて和解の精神を若い世代に伝える作業が不可欠だ。中国人受難者・遺族らの西松建設に対する賠償請求を支えた「西松建設裁判を支援する会」は、「歴史事実を継承する会」は、発展的解消をした。中国電力の現場責任者は、遺族の一人から「父たちが作った発電所を未永く使ってください」と話しかけられ、「大事に使います」と答えたという。こうした積み重ねによって、「受難の碑」は「友好の碑」となるだろう。

翌日、中国人受難者らは広島市の原爆資料館を訪れた。尖閣諸島問題を契機として日中双方の若者の間に愛国という「正義」のぶつけ合いと憎しみが醸し出されつつある現在、草の根の交流の大切さを痛感する。(うただ・まさとし) 弁護士、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委員長

日・中・韓は「一衣帯水」「一葦水」の間にある隣国

- 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から「徴用工問題」解決の道を模索する

内田雅敏(弁護士)

はじめに

「日中両国は一衣帯水の間にある隣国であり、長い伝統的友好の歴史を有する」、1972年9月29日、日中国交正常化を果たした、田中角栄首相と周恩来総理との間でなされた日中共同声明の前文の一節です。

「一衣帯水」、つまり、日中両国は、一本の帯のような幅の狭い水(海)によって隔てられた、近く、また「長い伝統的な友好の歴史」を有する親しい国と云う意味です。古代における遣唐使の派遣など、日本は中国文明から多くのものを受け取ってきました。

これに倣って、中国よりもっと近い日韓関係を「一葦水」の間にある隣国、すなわち一本の葦のように細い水(海)によって隔てられた近い、親しい国という云い方がなされます。韓国とは、渡来人、薩摩における薩摩白焼きの陶工の村、朝鮮通信使、など「長い伝統的友好の歴史」を有する親しい隣国です。

対馬藩の儒学者雨森芳洲の唱えた「善隣友好」という言葉もよく知られています。

昨2018年、来日した韓国人旅行者は約750万人、全来日外国人旅行者3000万人の4分の1を占めます。日本からの韓国への旅行者は約300万人、実に1000万人の人々が日本と韓国の間を行き来しているのです。韓国駐在の長かった元商社マンの私の友人は、現在も韓国から年金を受領してい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親密な日韓関係が、韓国大法院の元徴用工判決を契機とし、日本政

寄稿

内田雅敏(弁護士)

日中の緊張緩和に貢献

三菱マテリアル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



働中に711人(他に船中で11人が亡くなった。筆者はこれまで、中国人強制労働・強制労働問題に関し、本件の他に鹿島の花岡和解(2000年)、西松建設広島安野和解(09年)に関与してきた。本三菱マテリアル和解は、前記二つの和解の延長上のものであり、前二者に比べ、①三菱鉱業全体の事業所だけでなく、下請け先も含む3765人を対象とする②謝罪内容において踏み込み、会社の責任者が中国に赴き、直接、受難者に謝罪かに行き、さらには深い豊かにすることができ、それは民間による日中友好運動の一つでもある。そして本和解は、歴史に真摯に向き合い、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ささやかな慰藉をなすものであるが、同時に、昨今の日中の安全保障を巡る環境整備に資する。(つただ・まさひと)

「過じて改めざる」是を過ちという。6月1日、北京で締結された三菱マテリアル社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において、同社の代表、木村光・常務執行役員が中国人受難生存労工に対して述べた「謝罪文の一節である。」

アジア・太平洋戦争が

長期化する中で、1942年、東条英機内閣は中国大陸から中国人を日本国内に強制連行し、鉱山、ダム建設現場などで強制労働に就かせることを企て、「華人労務者移入」に関する件を閣議決定し、同44年8月から翌45年5月までの間に3万8000人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鉱山、ダム建

設現場など135事業所で強制労働させた。同年8月15日の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の約1年間、苛酷な労働の中で6830人の中国人が亡くなった。三菱マテリアル社によれば、同社の前身である三菱鉱業株式会社と下請け会社は3765人の中国人労働者をその事業所に受け入れ、「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た。これについて謝罪文は「弊社は、中国人労働者の皆様の人権が侵害された歴史的事実を率直かつ誠実に認め、痛切なる反省の意を表する」当時の使用者としての歴史的責任を認め、中国人労働者及びその遺族の皆様に対し深甚なる謝罪の意

を表する」と述べる。謝罪文にある「事業所の中には昨年、世界ユネスコ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軍艦島」として有名な長崎市の端島海底炭鉱等がある。三菱マテリアル社は、謝罪の証として、中国人受難者・遺族に対し、1人当たり金10万円(約170万円)の和解金を支給し、さらに二度と過去の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記念碑の建立に協力し、この事実を次の世代に伝えていくことを約束する」とし、事業所等での「受難の碑」建立の費用、中国からの受難者・遺族をお招きしての追悼事業費を別途支給することとした。三菱鉱業では強制労働中に711人(他に船中で11人が亡くなった。筆者はこれまで、中国人強制労働・強制労働問題に関し、本件の他に鹿島の花岡和解(2000年)、西松建設広島安野和解(09年)に関与してきた。本三菱マテリアル和解は、前記二つの和解の延長上のものであり、前二者に比べ、①三菱鉱業全体の事業所だけでなく、下請け先も含む3765人を対象とする②謝罪内容において踏み込み、会社の責任者が中国に赴き、直接、受難者に謝罪かに行き、さらには深い豊かにすることができ、それは民間による日中友好運動の一つでもある。そして本和解は、歴史に真摯に向き合い、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ささやかな慰藉をなすものであるが、同時に、昨今の日中の安全保障を巡る環境整備に資する。(つただ・まさひと)



三菱マテリアルとの和解を正式発表し、記者会見する元労働者の関玉成さん=1日、共同

「三菱マテリアルとの和解を正式発表し、記者会見する元労働者の関玉成さん=1日、共同

「三菱マテリアルとの和解を正式発表し、記者会見する元労働者の関玉成さん=1日、共同

府による韓国向け半導体の輸出規制、それに対抗しての韓国政府による日韓軍事情報包括的保護協定(GSOMIA)の更新拒否通告、等々、短期間の間に一気に悪化し、来日する、韓国からの旅行者が激減しました。また日本からの韓国への輸出も激減しています。

第1 花岡(鹿島建設)和解

多くの人々から、同じく強制連行・強制労働問題なのに、中国人の場合には、花岡和解(鹿島建設)、西松建設和解、三菱マテリアル和解、などがあり、韓国人と中国人の場合とで違いがあるのはなぜかという質問を受けました。

違法な奴隷労働という点では、両者間に本質的な違いはありません。ただ、期間とその数において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

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1944年9月～翌45年8月までの約1年間、被害者数約4万人ですが、朝鮮人の場合は、期間も長く、被害者の数も20数万人～数十万人とはるかに多いのです。この違いを見据えたうえで、なお、韓国徴用工問題の解決を模索するに際し、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問題と和解によるその「部分的な解決」の成果を考えてみるのは、有益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

1. 閣議決定「華人労務者内地移入に関する件」

日本は、1931年9月18日、日本軍による中国奉天(現瀋陽)郊外の鉄道爆破の謀略(満州事変)を契機とし、1937年7月7日の北京郊外の盧溝橋事件を経て泥沼の日中「戦争」に陥り、ついに1941年12月8日の真珠湾攻撃から日・米・英、豪、加、蘭、等とも戦端を開くに至りました。

このアジア・太平洋戦争が長期化する中で、日本国内では成年男子が次々と出征させられ、深刻な労働力不足を招来しました。

これに対処するため、政府は、まず当時、植民地であった朝鮮半島からの労働力の移入を計りました。その形態は初期には「募集」、「官斡旋」後には徴用令による労働でしたが、その実態は「タコ部屋」による強制労働と変わりはありません。

せんでした。韓国大法院判決も奴隷状態であった強制労働の実態について言及しています。

悪化する戦況は、さらなる労働力を必要としました。

1942年11月27日、時の東條内閣は、中国大陸から中国人を日本国内に強制連行し、鉱山、ダム建設現場などで強制労働に就かせることを企て、「華人労務者内地移入に関する件」を閣議決定し、1944年2月28日の次官会議を経て同年8月から、翌1945年5月までの間に三次にわたり38,935人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国内の鉱山、ダム建設現場など135事業場で強制労働させました。

この強制連行・強制労働は、形式的には「雇用契約」の体裁を採っていましたが、戦闘における捕虜、占領地における民間人の有無を言わずの拉致等、強制連行・強制労働以外の何物でもなく、国際法違反は明々白々のものでした。

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の約1年間に、6830人が亡くなりました。死亡率17・54%です。

2. 「花岡事件」——1945年6月30日の「暴動」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うち、986人が秋田県大館市郊外の花岡鉱山(銅)に在った鹿島組(鹿島建設(株)の前身)花岡出張所に配置され、花岡川の改修工事などに従事させられました。

当時、増産の号令のもと、鉱山の地下を花岡川の下まで掘り進み、落盤により、日本人鉱夫11名、朝鮮人鉱夫11名が生き埋めなどにより亡くなった七ツ館坑落盤事故というのが起こり、さらに掘り進めるためには花岡川の流れを変える工事が必要になったのです。

彼らはろくな食事も与えられないまま、衣服も連れてこられた時のままで、寒い川の中で苛酷な労働を強いられ、次々と斃れて行きました。

このような奴隷労働に耐え切れなくなった彼らは、1945年6月30日夜半、4名の日本人指導員及び日本人に内通し、同胞を苦しめた食糧係の中国人1人を殺し、「暴動」を起こすにいたりました。世に言う「花岡事件」です。

この蜂起までに、すでに137名が、酷使、虐待の中で死亡していました。この絶望的な蜂起は、たちまち、憲兵隊、警察、地元警防団らによって鎮圧されまし

た。中国人らは山中に逃げ込みましたが、結局、全員が逮捕されました。彼ら逮捕された中国人らには、さらに厳しい拷問が待ち受けていました。

この鎮圧、その後の拷問の中で100人以上の者が殺されました。結局、鹿島組花岡出張所では、強制連行されてから、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の約1年の間に、連行された者の約半数に相当する418人が死亡しているのです。死亡率42.39パーセントであり、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全体の死亡率17.54パーセント(この数字自体が高いですが)の2倍以上となっています。

3. 俘虜収容所長からの報告

暴動の原因について調査を命じられた当時の仙台俘虜収容所長から、情報局宛てに昭和20年7月20付けでなされた「鹿島組華人労務者暴動状況ノ件」と題する報告書があります。故新美隆弁護士と筆者らが、米国の国立公文書館の資料調査で発見したものです。

同報告書は、「花岡暴動」の原因、動機として「元来十時間作業ナルモ六月二十ヨリ縣下一斉突撃作業ト称シ二時間延長ヲナシ十二時間トシタルモ之ニ対スル食糧ノ加配ナシ」、「食糧逼迫シ配給量必ズシモ満腹感ヲ得ルニ足ラザルニ拘ラズ組幹部ハ主食ノ一部ヲ着服シアリシモノノ如シ」、「華人労務者ニ対シテ一般ノ購入ヲ禁ジアルタメ個人トシテノ所持金ノ必要ナシト称シ昨年ノ八月以降労銀ノ支払イヲナシアラズ」と記載されているような労務加重、食糧不足、労賃の未払い、更に「華人ヲ取扱フコト牛馬ヲ取扱フ如クニシテ作業中停止セバ撲タレ部隊行進中他ニ遅レレバ撲レ彼等ノ生活ハ極少量ノ食糧ヲ与エラレ最大ノ要求ト撲ラレルコトノミト言フモ過言ニアラズ」と、鹿島組花岡出張所での強制労働がいかに苛酷なものであったかを如実に物語っています。

4. 「共同発表」で責任を認める

中国人生存者・遺族らは1989年、加害企業・鹿島建設に対して、一人当たり金500万円(当時、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による1人当たりの支給額の合計が約500万円となっていたことが根拠となりました)、合計50億円の損害賠償の請求

をなしました。

数回の交渉を経て、1990年7月5日、

鹿島建設は、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国策に基づくものであるが、「企業としても責任があると認識し、当該中国人生存者及びその遺族に対して深甚な謝罪の意を表明する」と、企業の責任を認めたのです。受難者遺族からの補償請求についても、双方が話し合いによって解決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ことも認めたのです。

5. 提訴から和解の成立まで

しかし、その後の交渉には進展が見られませんでした。

そこで1995年6月28日、耿諄氏ら11名の生存者・遺族が、代表訴訟として、鹿島建設に対して、一人当たり金500万円の損害賠償金を求めて東京地裁に提訴しました。中国人被害者による日本の裁判所に対する初の提訴でした。

2000年11月29日、東京高裁で和解が成立しました。

成立した和解は、和解条項の第1項で、1990年7月5日、鹿島建設と中国人受難者聯誼会が連名でなした前記の「共同発表」を再確認することから始まっています。

鹿島建設は強制連行・強制労働について「企業としても」責任を認め、被害者・遺族らに対し深甚なる謝罪をなし、和解金として金5億円を支出するとしました。

第2 西松建設(旧西松組) 広島安野の裁判、和解へ

1. 2004年7月9日、広島高裁(鈴木敏之裁判長、松井千鶴子判事、工藤涼二判事)は、広島地裁が認定した前記被害事実をそのまま認定した上で、

① 西松建設が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らに苛酷な生活をさせ、厳しい労働条件下で労働に従事させたことは、安全配慮義務違反に当たる。

② 中国人らが重大な被害を受けて、その後も種々の苦痛を受け続けたのに対して、西松建設は国家補償金取得により一定の利益を得ていること等によると、西松建設が消滅時効を援用して損害賠償義務を免れることは著しく正義に反し、条

理にもとるので、西松建設の消滅時効の援用は権利の濫用として許されない。

として原告受難者・遺族らからの請求を認容し、西松建設に受難者・遺族らに対し各金550万円の支払いを命ずる判決をなしました。

しかし、西松建設からの上告を受理した最高裁第二小法廷(は、2007年4月27日、広島高裁が認定した受難者らの被害事実をそのまま踏襲した上で、

「前記事実関係にかんがみて本件被害者らの被った精神的・肉体的な苦痛は極めて大きなものであったと認められる」と述べながらも、受難者らの請求権は、1972年9月29日の「日中共同声明」第5項に「中華人民共和国政府は、中日両国国民の友好のために、日本国に対する戦争賠償の請求を放棄することを宣言する」とあることから、「日中戦争の遂行中に生じた中華人民共和国の国民の日本国又はその国民若しくは法人に対する請求権は、日中共同声明5項によって、裁判上訴求する機能を失ったというべきであり、そのような請求権に基づく裁判上の請求に対し、同項に基づく請求権放棄の抗弁が主張されたときは、当該請求は棄却を免れない」と、受難者らの請求を棄却しました。

やや分かりにくいかもしれませんが、受難者らの損害賠償を求める権利については、日中共同声明5項で放棄されているので、裁判上の訴えは出来ませんよという意味であって、権利そのものが失わ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2. 判決末尾で述べられた「付言」

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は、前記のように受難者からの請求を棄却したものの、その「付言」という形で以下のように述べました。

なお……個別具体的な請求権について債務者側において、任意の自発的対応をすることは妨げられないところ、本件被害者らの蒙った精神的・肉体的苦痛が極めて大きかった一方、上告人(西松建設一筆者注)は前述したような勤務条件で中国人労働者らを強制労働に従事させて相応の利益を受け、更に前記の補償金を受領しているなどの諸般の事情にかんがみると、上告人を含む関係者において、本件被害者らの被害の救済に向けた努力を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ある。

さすがに受難者らの蒙った被害の甚大さを無視できなかったのです。

最高裁における敗訴判決後、2009年10月23日、西松建設と中国人受難者・遺族らとの間で、「付言」に基づき和解が成立しました。

3. 和解事業の展開

和解成立から1年後の2010年10月23日、広島県西北部の山間の地、安芸太田町安野で、中国からの生存者5名を含む受難者・遺族ら48名及び中国大使館員ら、国内外から多くの関係者の参列を得て、第1回中国人西松建設強制連行・強制労働受難者追悼式と記念碑の除幕式が行われました。

中国人受難者・遺族と加害者西松建設株式会社の連名で、「安野 中国人受難之碑」が建立され、碑の裏面には、中国語、日本語で、以下のように記されました。

第二次世界大戦末期、日本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1942年の閣議決定により約4万人の中国人を日本の各地に強制連行し苦役を強いた。広島県北部では、西松組(現・西松建設)が行った安野発電所建設工事で360人の中国人が苛酷な労役に従事させられ、原爆による被爆死も含め、29人が異郷で生命を失った。

1993年以降、中国人受難者は被害の回復と人間の尊厳の復権を求め、日本の市民運動の協力を得て、西松建設に対して、事実認定と謝罪、後世の教育に資する記念碑の建立、しかるべき補償の三項目を要求した。以後、長期にわたる交渉と裁判を経て、2009年10月23日に、360人について和解が成立し、双方は新しい地歩を踏み出した。

西松建設は、最高裁判決(2007年)の付言をふまえて、中国人受難者の要求と向き合い、企業としての歴史的責任を認識し、新生西松として生まれ変わる姿勢を明確にしたのである。

太田川上流に位置し、土居から香草・津浪・坪野に至る長い導水トンネルをもつ安野発電所は、今も静かに電気を送りつづけている。こうした歴史を心に刻み、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この碑を建立する。

2010年10月23日

安野・中国人受難者及び遺族
西松建設株式会社

加害と受難の歴史を記憶するためのものです。碑の両脇には受難者360名の名を刻んだ小碑を配しました。

碑の建立には地元安芸太田町、中国電力など各方面の協力がありました。

以降、2017年10月の第10回(途中、なるべく早く来日を希望する遺族をお招きしようということで、春・秋年2回開催の年もあった)の追悼式に至るまで、「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中国側、日本側の各委員で構成し、西松建設も参加)は、判明した248名の受難者・遺族の方々(360名中約69パーセント)に補償金をお届けし、希望された方々199名の受難者・遺族を順次追悼式にお招きし、交流しました。

来日した受難者・遺族らは、毎回、追悼式終了後、強制労働の現場を巡り、改めて、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当時に思いを馳せるとともに、翌日には原爆資料館を見学し、原爆被害の凄まじさに想像力を働かせ、慰霊碑に献花していただきました。原爆資料館ではボランティアの広島市民平和ガイドが案内してくれ、その中には広島大学博士課程に在籍する中国からの留学生もいました。

彼は、原爆資料館だけでなく、追悼式に参加した中国人受難者・遺族のために通訳としてずっと付き添ってくれています。

追悼式の中ではさまざまなエピソードがありました。

建設当時の発電所が現在も稼働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遺族の一人が、「父たちが作った、この発電所を、末永く使ってほしい」と、案内の中国電力の担当者に話しかけ、担当者は即座に「はい、大事に使わせていただきます」と答えたといいます。こういう話が、報告集会などで改まって話されるのではなく、案内の途中で、遺族がポツンと中国電力の社員に語り、そのやりとりを、こ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よと同行していた筆者にぽつんと話しかけ、教えてくれたのです。

原爆資料館を見学したある遺族は、その日の夜の交流集会で、「感想は三つある。惨い、惨い、惨い」と発言しました。

1945年8月6日広島に、9日に長崎に原爆が投下された時、南京で、重慶で、シंगाポールで、その他アジアの各地で、人々は、万歳を叫んだのです。「これで日本は敗れた！アジアは解放された！」と。

その万歳を叫んだ人々の子供、孫が、原爆資料館を見学して、「惨い、惨い、惨い」と感想を述べたのです。

和解事業として行われる追悼式、原爆資料館見学などの活動は、草の根の日中友好運動の一端を担うものです。「このような活動を続けることによって、やがて『受難の碑』は『友好の碑』となるであろう」と、ある受難者遺族が語ってくれたことが忘れられません。

《加害者は忘れても、被害者は忘れない》、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歴史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被害者の「寛容」と加害者の「節度」「慎み」が不可欠です。私たちはこのことを肝に銘じて、加害の事実と向き合い続けね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第3 三菱マテリアル和解 過ちて改めざる、これ過ち

「過ちて改めざる、是を過ちという」——2016年6月1日、北京で締結された三菱マテリアル社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和解において、同社の業務執行役員・木村光氏が、同社を代表して、中国人受難者・遺族らを代表した閻玉成(86歳)、張義徳(88歳)、閻順(95歳 娘が代理出席)さんら、生存受難者に対して述べた「謝罪文」のなかの一節です。

生存受難者らは、同社の「謝罪を誠意あるものとして受け入れ」(和解書第1条)、「私たちは、中国人労働者の強制連行を主導した日本政府、ならびにその他の多くの加害企業が依然として歴史事実を無視し、謝罪を拒む状況下で、三菱マテリアル社が歴史事実を認め、公開謝罪する姿勢を積極的に評価する」と述べました。

調印後に行われた記者会見で、閻玉成さんは、「和解を喜んでいる。目を将来に向けて、(日本側と)互いに平和的に共存したい」と述べられました。

三菱マテリアル社の「謝罪文」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第二次世界大戦中、日本国政府の閣議決定「華人労務者内地移入に関する件」に基づき、約39,000人の中国人労働者が日本に強制連行された。弊社の前身である三菱鉱業株式会社及びその下請け会社(三菱鉱業株式会社子会社の下請け会社を含む)は、その一部である3,765名の中国人労働者をその事業所に受け入

れ、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た。

また、この間、722人という多くの中国人労働者が亡くなられた。本件については、今日に至るまで終局的な解決がなされていない。

「過ちて改めざる、是を過ちという。」 弊社は、このように中国人労働者の皆様の人権が侵害された歴史的事実を率直かつ誠実に認め、痛切なる反省の意を表する。

また、中国人労働者の皆様が祖国や家族と遠く離れた異国の地において重大なる苦痛及び損害を被ったことにつき、弊社は当時の使用者として歴史的責任を認め、中国人労働者及びその遺族の皆様に対し深甚なる謝罪の意を表する。

併せて、お亡くなりになった中国人労働者の皆様に対し、深甚なる哀悼の意を表する。

「過去のことを忘れずに、将来の戒めとする。」 弊社は、上記の歴史的事実及び歴史的責任を認め、且つ今後の日中両国の友好的発展への貢献の観点から、本件の終局的・包括的解決のため設立される中国人労働者及びその遺族のための基金に金員を拠出する〔和解合意書第 条(謝罪)〕。

第4 三菱マテリアル和解についての新聞、テレビ等メディアの評価

2016年6月1日に締結された三菱マテリアル和解については、同日夕刻のテレビニュース、新聞夕刊、翌日の朝刊等で各紙が大々的に報じました。

新聞は、後述するように読売新聞、産経新聞を除いて朝日、毎日、日経等の全国紙はもちろんのこと、各ブロック紙、地方紙もみな、和解を歓迎しました。ちなみに各紙の社説の見出しを見ると、以下のとおりです。

「歴史の責任を果たす和解」(6月3日 毎日新聞)

「過去を直視した三菱マテ和解」(6月3日 日経新聞)

「中国強制連行 意義ある和解の決断」(6月6日 朝日新聞)

「中国人強制連行和解 風化にあらがう努力も必要」(6月3日 河北新報)

「強制連行和解 評価できる歴史的な合意」(○月○日 西日本新聞)

「強制連行和解 加害に向き合う姿勢こそ」(6月3日 信濃毎日新聞)

「戦後処理加速の契機に 強制連行和解」(6月7日 長崎新聞)

このうち「歴史の責任を果たす和解」と題した毎日新聞の社説が、この問題をめぐる和解の経過も押さえた上で述べており、もっとも明快です。

……戦争末期、過酷な労働状況に耐えかねた中国人労働者が蜂起し、弾圧された秋田の花岡事件では2000年に東京高裁で被害者と鹿島(旧鹿島組)との和解が成立した。

09年には広島県に強制連行された労働者と西松建設との和解も実現した。西松建設の和解は07年の最高裁判決がきっかけだ。中国国民の賠償請求権は72年の日中共同声明で「裁判上訴求する権能を失った」と初の判断を示し、請求を退ける一方、強制連行の事実や劣悪な労働環境を認め、同社に「被害の救済に向けた努力」を求めたからだ。

三菱マテリアルは昨年、旧三菱鉱業の鉱山で米国人捕虜を働かせたことを認め、元捕虜に謝罪するなど歴史の清算に動いてきた。日本政府は賠償問題は決着済みとの立場だが、企業の自主判断による和解は最高裁が求める「被害救済」の精神に沿ったものだ。

今回の和解では同社が歴史的責任を認めて謝罪し、基金や記念碑の建立のほか、判明していない被害者や遺族の所在調査にも協力する。全員との和解には時間がかかるだろうが、和解を受け入れた被害者は同社の姿勢を評価している。誠意は他の中国の人たちにも伝わるはずだ。……

このような和解を歓迎する論調に対して、2016年6月6日付けの読売新聞社説は、「三菱マテ和解 形を変えた中国の揺さぶりか」というタイトルで、「日本企業を相手取った新たな訴訟や賠償請求の動きが中国で広がらないか、懸念される」と述べました。

同じく6月5日付けの産経新聞「主張」も、「三菱マテ『和解』 政府は容認しているのか」というタイトルで、「理解できないのは『民間の問題』として、これを容認するかのような日本政府の対応である。戦後補償問題は、個人補償を含め法的に解決済みだ。この原則を崩してはならない」と述べています。これらの論調には、被害者に対する視点がまったく欠落しています。

寄稿

内田 雅敏 (弁護士、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委員長)

「受難の碑」を「友好の碑」に

広島で中国人強制連行・労働受難者追悼式

10月20日、広島県安芸太田町安野で、中国からの受難者遺族18名を迎え、第5回西松建設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受難者追悼式が行われた。

第二次世界大戦末期、国内の労働力不足に対処するため、閣議決定を経て、約4万人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鉱山、土建、港湾荷役などの現場で強制労働をさせた。安野の地でも360名の中国人が西松組(当時)のもと、安野発電所建設工事に従事させられ、過酷な労働によって、被爆死5名を含む29名の方々が異国の地で亡くなった。

中国人受難者・遺族らは地元広島を中心とする日本側支援者らの協力を



「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前で行われた第5回追悼式
筆者提供

得、16年間に及ぶ交渉と、翌年10月23日、中国電力「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裁判を経て、2009年 安野発電所の一角に、中国電力など各方面の協力があつた。同日の追悼式で、今に至るまで、判明した212名の受難者・遺族に補償金を届け、順次153名の受難者・遺族の方々の追悼式に招き、交流してきた。

5回にわたる追悼式では、さまざまなエピソードもあつた。当時の発電所が現在も稼働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遺族の一人が「父たちの造ったこの発電所を、未永く使ってほしい」と、案内の中国電力担当者に話しかけたところ、担当者が即座に「はい、大事に使わせて

いただきます」と答えた野において、盛大に祝われるはずであった。今回の追悼式にも、当初30数名の中国人受難者遺族が参加の予定であったところ、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の領有をめぐる日中間の緊張の中で、「日本に行くのが怖い」として十数名が、来日を取りやめた。

このように時こそ、日中の民間人同士の交流が大事である。関係者の尽力により、八太田川上流に位置し、長い導水トンネルを持つ安野発電所は、今も静かに電気を送り続けている。こうした歴史を心に刻み、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この碑を建立するべく刻まれた「受難の碑」の前で、第5回追悼式を行い、受難者遺族らと友好・信頼を確認し合えたことを喜ぶたい。こうした取り組みが日中双方の社会において広く伝えられ、現在の日中関係を変え、大きな力となることを、心から願う。

今年の日中文化交流40周年、本来ならば、政治、文化、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盛大に祝われるはずであった。今回の追悼式にも、当初30数名の中国人受難者遺族が参加の予定であったところ、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の領有をめぐる日中間の緊張の中で、「日本に行くのが怖い」として十数名が、来日を取りやめた。

文化

日中真の戦後和解へ

強制連行の加害と受難刻み「記念碑」

昨年10月23日、西松建設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について中国人受難者・遺族と西松建設の間で、同社が加害の事実、及びその歴史的责任を認め、謝罪し、補償金を支払うという和解が成立した。和解成立1周年を迎えた今年10月23日、生存者

5名を含む中国人受難者・遺族ら40名及び中国大使館員ら、国内外から多くの関係者の参列を得て、広島県西北部の山あいの地、中国電力安野発電所の一角で、二胡の音色が静かに流れるなか、慰霊式と記念碑の除幕式が行われた。



内田 雅敏

除幕された「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には、受難者及び遺族と西松建設の連名により日本語と中国語で次のような碑文が刻まれた。

「第二次世界大戦末期、日本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略)約4万人の中国人を日本の各地に強制連行し苦役を強いた。(略)安野発電所建設工事で360名の中国人が苛酷な労働に従事させられ、原爆による被爆死も含め、29人が異郷で生命を失った(略)」「中国人受難者は被害の回復と人間の尊厳の復権を

求め、(略)長期にわたる交渉と裁判を経て、和解が成立し、双方は新しい地歩を踏み出した。西松建設は、(略)中国人受難者の要求と向き合い、企業としての歴史的责任を認識し、新生西松として生まれ変わる姿勢を明確にしたのである。

「太田川上流に位置し、(略)長い導水トンネルをもつ安野発電所は、今も静かに電気を送りつけている。こうした歴史を心に刻み、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この碑を建立する」

加害と受難の歴史を記憶するために被害者と加害者が「日中両国の子々孫々の友好を願って」建立した記念碑は、まさに

和解を象徴するものだ。「和解」という語を『広辞苑』で引くと、①相互の意思がやわらいで、とげあうこと、なかなかおき、②(法)争いをしている当事者が互いに譲歩しあつて、その間の争いを止めることを約する契約。示談とある。

裁判上の和解は②の意味だ。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は、歴史の清算の問題であり、その和解は、限りなく①に近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加害者と被害者の連名による記念碑の建立で、①の意味での和解に近いわけである。

除幕式で生存者の邵義誠氏は「故郷を遠く離れ、祖国を遠く離れた異国の地に、かつて強制連行され非人間的な労働を強いられた地に、ついに真実の歴史を刻んだ記念碑が建立されました。敢然と歴史的责任を認めて実際の行動で謝罪した新生西松建設に敬意を表します」と述べた。

西松建設も「改めてその歴史的责任を認識し、安野における360名の受難者およびその遺族に対して深甚なる謝罪の意を表明致し、『安野 中国人受難

之碑」が日中友好協力関係のさらなる発展に寄与せんことを」とあいさつした。

記念碑建立には、敷地を提供した中国電力そして地元安芸太田町などの協力があつた。

記念碑は、建立だけでは完結しない。維持管理を通じて和解の精神を若い世代に伝える作業が不可欠だ。中国人受難者・遺族らの西松建設に対する賠償請求を支えた「西松建設裁判を支援する会」は、「歴史事実を継承する会」は、発展的解消をした。中国電力の現場責任者は、遺族の一人から「父たちが作った発電所を未永く使ってください」と話しかけられ、「大事に使います」と答えたという。こうした積み重ねによって、「受難の碑」は「友好の碑」となるだろう。

翌日、中国人受難者らは広島市の原爆資料館を訪れた。尖閣諸島問題を契機として日中双方の若者の間に愛国という「正義」のぶつけ合いと憎しみが醸し出されつつある現在、草の根の交流の大切さを痛感する。(うただ・まさとし) 弁護士、西松安野友好基金運営委員会委員長



邵義誠さん(右から)自ららが除幕した「安野 中国人受難者追悼式」の前で行われた第5回追悼式
筆者提供

역사문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치우스제(邱士杰, 사면대학)

克服歴史問題與東亞和平

邱士杰(厦門大學)

寄稿

内田雅敏(弁護士)

日中の緊張緩和に貢献 三菱マテリアル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



「過つて改めざるは是を過ちといふ」。6月1日、北京で締結された三菱マテリアル社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において、同社の代表、木村光・常務執行役員が中国人受難生存労工に対して述べた「謝罪文の一節である。」

「過つて改めざるは是を過ちといふ」。6月1日、北京で締結された三菱マテリアル社中国人強制労働事件和解において、同社の代表、木村光・常務執行役員が中国人受難生存労工に対して述べた「謝罪文の一節である。」



三菱マテリアルとの和解を正式発表し、記者会見する元労働者の関玉成さん＝1日、共同

設置場など135事業所で強制労働させた。同年8月15日の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の約1年間、苛酷な労働の中で6830人の中国人が亡くなった。三菱マテリアル社によれば、同社の前身である三菱鉱業株式会社と下請け会社は3765人の中国人労働者とその事業所に受け入れ、「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た。これについて謝罪文は「弊社は、中国人労働者の皆様の人権が侵害された歴史的事実を率直かつ誠実に認め、痛切なる反省の意を表する」当時の使用者としての歴史的責任を認め、中国人労働者及びその遺族の皆様に対し深甚なる謝罪の意を表する」と述べる。謝罪文にある「事業所の中には昨年、世界ユネスコ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長崎市の端島海底炭鉱等がある。三菱マテリアル社は、謝罪の証として、中国人受難者・遺族に対し、1人当たり金10万円(約170万円)の和解金を支給し、さらに二度と過去の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記念碑の建立に協力し、この事実を次の世代に伝えていくことを約束する」とし、事業所等での「受難の碑」建立の費用、中国からの受難者・遺族をお招きしての追悼事業費を別途支給することとした。三菱鉱業では強制労働中に711人(他に船中で11人)が亡くなった。筆者はこれまで、中国人強制労働・強制労働問題に関し、本件の他に鹿島の花岡和解(2000年)、西松建設広島安野和解(09年)に関与してきた。本三菱マテリアル和解は、前記二つの和解の延長上のものであり、前二者に比べ、①三菱鉱業本体の事業所だけでなく、下請け先も含む3765人を対象とする②謝罪内容において踏み込み、会社の責任者が中国に赴き、直接、受難者に謝罪かに行うことができる。それは民間による日中友好運動の一つでもある。そして本和解は、歴史に真摯に向き合い、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さまざまな慰藉をなすものであるが、同時に、昨今の日中の安全保障を巡る環境整備に資する。(つちだ・まさこ)

역사문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치우스제(邱士傑¹⁾, 사면대학)

1. 중국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타이완인 선생으로서

나는 타이완 타이베이 현지인으로 타이완에서 속칭 ‘本省인(本省人)’(타이완성 출신자. 가족이 청나라와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를 경험한 본토 타이완인으로, 1945년 타이완 해방 이후 타이완으로 이주한 중국 대륙 각 성 출신의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음)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타이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중국 근현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도로서 학부, 석사, 박사 학위 취득까지 모든 학업을 타이완 대학 역사학과에서 마쳤다. 그래서 타이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타이완 이외의 지역으로 건너가 학술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기회와 인연으로 2017년 타이완을 떠나 중국 대륙(이하 ‘대륙’으로 약칭)으로 건너와 샤먼 대학 역사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대륙의 강단에서 대륙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나에게서는 실로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타이완 대학 재학 기간에 일본의 대외 식민 침략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역사 과목을 개설해 대륙 학생에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일본이 류큐(오키나와), 중국 타이완, 조선 그리고 중국 동북(만주)을 침략한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본 적이 있다. 그 수업에서 나는 대륙 학생이 일본 식민지 침략 역사 이해에 열정적인 편은 아니라는 느

1) 사면대학 인문대학(역사학과)와 경제대학 겸임 조교수. Email: qjushijie@ntu.edu.tw

낌을 받았다. 대륙 학생은 내가 소개한 지역의 역사를 알고 싶어했지만 이들 지역이 겪은 식민 침략에 대해 흥미를 가질 필요는 없었다. 왜 그러할까?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본의 대외 침략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대륙 이외의 타 지역의 역사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해 일본의 대외 식민 역사는 최근 30여년간 타이완 역사 교육과 각 대학 역사학과의 뜨거운 주제였고, 타이완 학생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상당한 '열정'이 있다. 물론 타이완 학생의 '열정'은 동시에 '식민통치 미화론(殖民統治美化論)'도 포함된다.

대륙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나는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역사보다 일본의 근대사(특히 근대 천황제와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역사)를 좀 더 많이 가르쳤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어쩌면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 주권 국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효과도 그리 크진 않았다. 수업에 관해 좀 더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본의 대외 식민 역사는 지금의 대륙 대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과제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원인을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중국 혁명으로 중국은 진정한 독립 자주 국가가 되었다. 이들 학생은 모두 진정한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다. 둘째, 20세기 전반에 걸쳐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처했지만, 이것은 식민지 경험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 조상들이 겪었던 식민지 시대에서 살았던 경험이 없는 것이다. 동북(만주), 홍콩, 마카오 및 각 조계지와 지금의 타이완을 제외하고 식민지 경험은 절대다수의 중국인들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 경험을 간직한 동북, 홍콩, 마카오, 타이완이 직접 겪은 식민지 경험이 일반 중국인이 중국 근현대사를 재인식하는 데 있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되진 않았다)

작년(2018년)부터, 대륙은 타이완 현지 고등학교 예비 졸업생이 대륙의 대학 진학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래서 나 역시 대륙 대학 강의실에서 타이완에서 온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타이완에서 온 학생들의 역사 상식은 상당히 수준급이다. 하지만 수많은 중요한 역사 문제를 상식차원에서 이해하다 보니 타이완 학생은 올바른

입장으로 역사 문제가 의미하는 가치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 학생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안부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라는 위안부자원론(慰安婦自願論)'을 쉽게 받아들인다. 타이완 학생 역시 일본 제국주의가 잔인한 폭력으로 타이완을 통치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친일의 입장에서 '일본식민통치 미화론'을 옹호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이완 학생은 타이완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중국이 통일을 이룬 사실이 향후 양안이 다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즉, 역사 사실을 인식했다고 해서 타이완 학생이 그에 걸맞는 역사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타이완 학생이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 되었다.

비록 우리는 타이완 학생이 단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부족해서' 그에 맞는 역사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문제의 핵심은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많고 적음)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이완 학생 또한 스스로 역사 사실을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가치가 완전히 일치하는(合一)' 태도가 형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타이완 학생은 '사실과 가치가 완전히 일치하는(合一)' 입장에서 출발해(타이완과 중국 대륙의 서로 다른 상황과 타이완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반공 입장) 다른 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는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타이완 학생은 '양안이 통일을 이루었던 역사 사실'이 지금에 이르는 타이완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규제했는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륙 학생도 타이완 학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역사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 학생은 대륙 학생은 정부에 의해 '속은' 계층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대륙 학생들이 1989년 운동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 대륙 학생은 1989년 운동을 공식적인 경로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운동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타이완 학생은 대륙 학생이 자주 권리로 타이완 학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주저한다는 것이다. 타이완 학생은 늘 자신만이 옳다고 안다.

강의를 통해 느낀 점: 지금의 타이완 학생들은 인류 역사는 이미 종결했으며, 타이완과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 세계'가 함께 인류 역사 발전의 '최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종결감은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그리고 중국 대륙의 개혁 개방을 전제로 하고 중국 대륙을 타이완의 비교 대상으로 여긴다. 타이완 학생은 타이완은 이미 인류의 모든 진보적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2019년 타이완 당국이 통과시킨 동성애 혼인법안은 타이완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쾌감을 선사했다. 나도 타이완 학생과 대륙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강의실에서 이런 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비록 경제 발전과 물질적 건설의 속도는 중국 대륙과 비교가 안 되더라도, 타이완의 현재 계급 갈등과 사회 위기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학생들은 타이완의 '현재 상황'이 괜찮은 편이며 타이완은 반드시 '현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의 '역사'를 인식하고 타이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완 학생은 역사 사실과 역사 가치의 일체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 타이완 학생은 20세기 중국 혁명을 재인식해야 하며, 나와 조국(중국)의 관계 및 타이완과 동아시아 관계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국 혁명사 인식은 왜 중요한가? 비록 지금의 타이완에서는 이미 타이완 역사 연구와 관련 역사 지식 보급이 주류가 되었지만 이러한 타이완 역사 연구는 타이완인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운동 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하의 타이완은 꾸준히 '근대화'되는 아름다운 시대로 포장되었고, 타이완 민중이 '일본의 통치를 원하는' 말 잘 듣는 순민(順民)으로 그려졌다. 이와 비교해 1945년 타이완 해방(타이완이 일본 식민 통치를 벗어나 조국으로 반환된 것) 이후 역사는 '중국인이 타이완인을 억압' 하는 '민족 억압사' 로 그려졌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원하는 것은 타이완의 차세대 청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전제가 되었다. 그래서 '남경대학살부정론', '위안부자원설', '식민통치미화론', '다오위다오 주권론 포기' 및 '일본인과 함께 한국을 압박하자'는 생각을 수많은 타이완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20세기 중국 혁명 역사가 타이완의 주류 역사 교육에서 시종일관 배척된 결과이기도 하다. 타이완 학생은 중국 혁명의 일부인 타이완인의 반제국주의 운동사를 재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완인의 진정한 주체성 역사 동력과 역사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왜곡된 역사 인식이 생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은 공교롭게도 지금의 타이완이 여전히 식민통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상황(미일 제국주의 지배하의 새로운 식민지 통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 대륙 학생들이 식민지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면 양안 교류와 동아시아 평화를 대대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안이 인적 왕래를 시작한 이후 (특히 대륙 학생이 타이완에서 학위를 받거나 단기 교류 등) 수많은 대륙 학생들이 대부분의 보통의 대륙 학생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타이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타이완의 주류 담론 특히 타이완 독립파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이완이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역사와 국민당 통치 하의 타이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타이완 민중이 20세기 겪은 고통을 이해하며 소중한 중국 혁명 역사 경험과 이론에서 다시 출발할 때 양안 간의 진정한 교류는 시작될 수 있다.

2.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 문제 가려져

금년 7,8월 들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운동의 영향으로, 타이완 각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레논 벽(Lennon Wall)이 등장했고 타이완 학생과 타이완에서 유학중인 대륙 학생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대륙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 최근, 한국 역시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물론, 홍콩 현지는 대륙 국적의 중국인들을 적대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폭력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홍콩 각 대학의 대륙 학생은 이미 이번 달 초 대거 홍콩을 떠났다. 혹자는 이번 대륙 중국인을 겨냥한 대규모 배척 운동은 마치 1938년 나치당이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을 공격했던 제국의 크리스탈 나흐트(Reichskristallnacht,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와도 같다고 하며 대륙 학생들의 홍콩 탈출은 홍콩판 덩케르크 작전(Dunkirk Evacuation)과도 같다고 했다.

중국 대륙 이외의 한국, 타이완 일본 여론은 홍콩 사태를 동정하고 있다. 비록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운동가들이 영국 식민지의 깃발과 미국 국기를 들고 있고, 이 운동이 파시즘의 적대와 배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환 후 홍콩이 실제로 영국령이던 시절보다 더 많은 민주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타이완의 여론은 여전히 추상적인 모습으로 홍콩 문제를 보고 있다.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 수많은 한국과 일본 친구들은 중국 정부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를 비판하는 가

짜 뉴스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실질적인 의미를 알고 하지 않는다. 영국 식민지 홍콩이 150년 간 겪은 폭행과 홍콩 반환 이후 얻은 성과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실인 것 같다.

홍콩의 현재 상황을 보며 나는 2014년 타이완에서 일어난 ‘해바라기 운동’을 떠올렸다. 이 배외주의 운동에서 수많은 타이완 청년 학생은 마치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자세로 그들이 반대하는 정치인과 ‘중국인’은 ‘지나천축(支那賤畜)’이라고 비난했다. ‘지나’는 근대 일본에서 중국을 멸시하며 사용한 이름으로 이런 멸칭(蔑稱)이 지금의 타이완에서 청년 학생들이 적을 공격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 해바라기 운동이 반대한 ECFA(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는 2020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의 타이완 여론은 타이완이 ECFA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타이완과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반중국 운동은 일본과 한국에서도 ‘진보 인사’와 ‘좌파 인사’의 지지를 얻었다. 그 중에도 내가 잘 아는 친구들도 있다. 홍콩과 타이완의 반중국 운동을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당혹스럽다. 더 많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이 오히려 홍콩과 타이완에서 일어난 반중국 운동을 틈타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동아시아 민족이 단결해 반대해야 할 미일 제국 주의는 더 이상 동아시아 국민이 가장 먼저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분명, 지금 우리 눈 앞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역사 문제가 이번 일련의 反中을 둘러싼 충돌문제로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대신 중국 대륙 청년과 대륙 주변 국가와 지역의 청년(홍콩, 타이완, 한국, 일본) 간의 대립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되었다. 식민통치 역사 문제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제국주의 식민 침략을 받았던 중국을 오히려 모두가 비난할 때 중국 혁명으로 대표되는 자주, 사회주의, 근대화 노선과 서구 국가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대륙과 대륙 주변 국가와 지역 간 형성된 ‘분단체제’, ‘신냉전’이 현재 이 지역에서 재현되려고 한다.

신냉전이 도래하려고 하는 지금, 타이완, 한국 등 민족 투쟁의 역사는 서서히 현실 정치와 결합되어 ‘등급화’ 되고 있다. 지금의 한국과 타이완에서 80년대 이후 민주화 투쟁 경험이 가장 칭송되는 민중 투쟁인 것 같다. 50년대 이전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 선혈을 흘리며 희생이 있었고 사회주의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된 각종 투쟁과 희생을 낳았

던 타이완의 ‘50년대 백색 테러’, 한국 제주 4·3사건, 여수 순천 사건과 일본 식민 통치 시기 항일 운동 등은 ‘등급화’ 과정에서 80년대 민주화 투쟁보다 못한 ‘차등의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 사실에 대해 ‘등급화’를 매기는 현상은 반세기 들어 국제 역사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대주의(relativism)’ 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저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 Hobsbawm)은 〈오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Marxist Historiography Today)〉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대주의는 과거 모델과 규율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를 없애고 역사의 흐름의 우연성을 강조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특히 선호했던 일반화(generalizations)를 배제한다. 실제로 이런 상대주의의 논점은 모든 과학을 반대한다.” 홉스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역사학에서 상대주의의 정치 리스크는 ‘反보편주의’ 또는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똑같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대주의의 사조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 정체성의 역사(identity-group history)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정체성에 있어 역사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집단 정체성에 호소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 분석이 아닌 ‘의의(意義)’이다. 무엇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이다.”²⁾ 지난 몇 년 간 일본의 역사학 정기 간행물인 〈역사평론(歴史評論)〉에서도 ‘지금의 세계는 자신의 기억이 올바른 기억이자 표현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며, 냉정한 세계관보다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전쟁을 중심으로 한 기억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역사평론〉 2017년 8월호 편집자)

홉스봄은 상대주의의 기초에서 다양한 집단 정체성의 역사를 세우는 현상을 ‘기억의 폭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홉스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기억의 폭발’은 ‘폭발’한 다양한 기억 간에 상호 평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류에 있는 특정 집단 정체성(예를 들어 타이완의 분리주의 운동)은 다른 사람의 기억을 억압하고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상대주의의 사조 안에 절대적인 기억

2) Eric Hobsbawm, “Marxist Historiography Today,” in Marxist History-wri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의 패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 패권은 타인의 기억을 소멸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해석하기 어려운 역사 사실을 ‘등급화’ 하고, 서로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서로 다른 역사적 사실이 현실 정치의 필요에 따라 등급화 되면 동아시아 각 지역 민중은 상호간의 역사를 인식하기 어렵고 자신의 진짜 역사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1997~2002년 한국, 류큐, 일본, 타이완 등 지역에서 공동 개최한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 세미나>가 종종 생각한다. 서승 선생님, 린슈양 선생님(林書揚,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 34년 7개월), 천밍충 선생님(陳明忠, 타이완의 마지막 정치 사형수)와 천잉진 선생님(陳映真, 타이완의 유명 작가, 정치범)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선배들은 국경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웠다. 선배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해외 친구들의 경험을 이해하였다. 선배들이 나눈 경험은 무엇인가? 바로 80년대 민주화 투쟁보다 훨씬 이전의 민중 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 역사는 오히려 한국과 타이완의 ‘등급화’ 된 네러티브 속에서 저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경험은 이보다 더 앞선 민중 투쟁 경험을 대체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민중은 서로 감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잃었고, 20세기 동아시아 혁명 전통을 계승한 중국 대륙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게 되었다. 80년대 민주화 투쟁 경험을 간직한(타이완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일본과 서구 국가의 입장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내부의 공통 경험과 국제 연대의 경험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보편적인 가치 환상에 의해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타이완과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투쟁 경험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 환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버렸다.

3. ‘망각→기억→재망각’의 정신적 딜레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단에서 만나는 타이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이런 역사 사실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가치 판단은 할 수 없다.

이런 기이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기억’과 ‘망각’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타이완 학생에게 있어 1895~1945년의 타이완 항일 운동사와 국민당 일으킨 50년대 백색 테러는 타이완 당국이 오랫동안 민중의 ‘망각’을 강요하다가 지난 30년 간 비로소 ‘타이완정부가’ 허락한 민중이 알아도 되는 역사 사실이다. 그러나 타이완 학생이 다시 얻은 ‘기억’은 ‘망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타이완 학생이 현재 보여주는 사상은 ‘기억 속 재망각’, 즉 ‘망각→기억→재망각’과 같다. 이는 일부러 특정 역사 사실과 가치를 ‘망각’하는 과정이며, 민중 투쟁의 경험을 다시 ‘등급화’ 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타이완 분리주의 학계는 ‘50년대 백색테러’ 연구에 열중해 있고 당시 희생된 수많은 타이완의 중공 지하당 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 성과는 ‘타이완인이 40년대 지하당에 참여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이 합리성이 지금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여기거나 ‘만일 당시 지하당 희생자들이 오늘 부활한다면 그들 역시 타이완 독립이나 중국 반대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최저 계급’의 역사 사실(40년대 타이완 중공 지하당 투쟁)은 주류 이데올로기가 정한 ‘최고 계급’의 가치(反共의 타이완 분리주의)와 역지로 결합해야만 ‘기억’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억은 결국 망각과 같은 것이 아닌가? 타이완의 유명 작가인 천잉진 선생은 일본 식민통치와 국민당 통치가 타이완 민중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국 상실증’과 ‘백치화 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망각→기억→재망각’은 ‘백치화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루선의 <망각을 위한 기념>은 ‘기억’과 ‘망각’을 반성하는 고전이다. <망각을 위한 기념>은 루선이 국민당이 처형한 ‘좌련 5열사(左聯五烈士, 좌련 소속 다섯 작가가 국민당 당국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살해된 사건_역주)’을 기념하기 위해 집필한 글이다. 루선은 이 글의 마지막에 국민당의 핍박 속에 희생된 열사에 대해 “나는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나는 알고 있다.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생각해 내고 다시 그들에 대해 말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라고 했다. 20세기 이후 중국인에게 <망각을 위한 기념>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생각해 내고 다시 그들에 대해 말할 날이 오리라’로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망각을 위한 기념’이라는 이 글귀는 20세기 중국의 역사 기억에 관한 고전 명구이자, ‘망각할 수 없는 기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절이다.³⁾

그러나 루쉰의 <망각을 위한 기념>은 단지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서경식 교수는 <길고 긴 험준한 길(長くきびしい道のり)> 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루쉰(魯迅)을 처음 만난 건 중학생 무렵이 읽은 <망각을 위한 기념>이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그들(좌련 5열사)의 일을 잊고 싶었다”는 문장은 루쉰 특유의 매우 신랄하고도 반어적인 문학표현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로 그들(좌련 5열사의 희생)의 일을 잊고 싶었으리라.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매일같이 이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겁니다.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는 때가 온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나도 잊고 싶다’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경식 선생은 이어서 이야기한다.

현재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1931년 국민당의 백색 테러에 대한 루쉰의 한 맺힌 기억은 이제는 역사 속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물론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나)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저는 제 형제들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와 1945년 우리나라의 해방과 분단, 그 이후로도 끊임 없이 없었던 유혈과 비명 소리, 가능하다면 그 기억들을 행복한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 낼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 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를 위해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옥중에 있는 형들(서승 선생님과 서준식 선생님)의 자유라는 개인사 뿐만 아니라 민족,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⁴⁾

3)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망각을 위한 기념’이나 ‘망각할 수 없는 기념’ 두 문장을 검색하면 검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망각할 수 없는 기념’ 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이후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것이 기억을 통한 선별과 기억의 구조 정립이며,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범위로 한 강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4) 서경식 도교, 가계소보, 2001, 86-88p

서경식 선생의 ‘망각’에 대한 소감은 진실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전제로 한다. 진실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야 ‘어떻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것인지’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망각’과 ‘기억’,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연결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연결하라’는 요구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고통’에서 출발해 지금 사회 변혁을 실현하고 ‘행복의 미래’로 향하게 한다.⁵⁾ 즉, ‘망각→기억→재망각’은 완전히 ‘행복한 미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과거의 고통’을 ‘현상 유지’(예를 들어 양안의 분단)의 수단으로 삼는다. 미래로 향하는 실천은 이미 ‘현상 유지’라는 큰 목표 속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모든 ‘망각’은 여전히 ‘망각’이며, ‘기억’은 한층 더 깊은 ‘망각’이 되었다.

4. 소결: 민중 투쟁의 역사 속에서 나와 타인의 역사를 발견

오늘날 동아시아, 적어도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 일본, 한국/북한은 역사 기억이 고도의 분열되는 상황에 처해있고, 역사 문제가 전혀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20세기 동아시아 각 국가와 지역의 민중이 단결 투쟁하고 제국주의에 저항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돌아봐야 하며, 지금 특히 부각되는 역사 경험과 그 의의를 엄중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구의 가치관으로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 동아시아 민중은 오롯이 자신만의 역사를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자신의 역사와 타인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시하면 우리는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5) 왕후이(汪暉)의 ‘기억’은 ‘수동적인 기억’에서 ‘능동적인 망각’으로 전환되는 행동이다. 여기에서 핵심 문제는 망각과 기억이 아니라 능동과 수동이다. ‘기억’이 없는 ‘망각’은 그저 나약한 노예 도덕일 뿐이며 ‘망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로부터 해방을 말한다. ‘망각을 위한 기념’은 이해 중독 속의 중독 불가성(사건의 독특성)의 경로로 인간은 이로써 새로운 행동을 하기로 자각하는 것이지 과거의 기념비에 매여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다. ‘망각을 위한 기념’은 이로 인해 정치 행동이 되는데 역사 관성의 단절을 통한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필요 계기이다. 왕후이의 <기념비의 한계, 어쩌면 진짜 앞의 시작>, <오늘(今天)> 제 109기 <왕후이 특별집(汪暉特別專輯)>

克服歷史問題與東亞和平

邱士杰¹⁾(廈門大學)

一、作為一個在中國大陸的大學教歷史的台灣教師

我是台灣台北本地人，也是台灣俗稱的「本省人」（即家族經歷過清朝統治和日本殖民統治的本土台灣人，而不是 1945 年台灣光復之後搬到台灣來的中國大陸各省移民）。從小到大，我的全部學校生活都在台灣度過；作為一個研究中國近現代歷史的學徒，我從本科到碩士、博士畢業間的全部學習也都在台灣大學歷史學系完成。因此，在我從台灣大學畢業之前，並沒有認真想過是否要去台灣以外的地方從事學術工作。不過，因為種種的機緣，我還是在 2017 年離開了台灣，來到了中國大陸（以下簡稱大陸），成為一名在廈門大學歷史系教書的老師。

如何在大陸的課堂上與大陸的大學生們講歷史，對我來說是有興趣的挑戰。由於我在台灣大學求學期間非常關注日本對外殖民侵略的歷史，因此我嘗試開設日本殖民地歷史的課程，向大陸的學生介紹日本自明治維新以來的資本主義、帝國主義發展史，並著重介紹日本侵略琉球（沖繩）、中國台灣、朝鮮，以及中國東北（滿州）的過程。在教學的過程中，我能感受到大陸學生對於認識日本殖民侵略史的熱情有限。大陸學生很願意了解我所介紹的這些地方，但他們不必然對這些地方遭遇的殖民侵略有興趣。為何如此？一個可能的原因是過去的中小學教育已經教育過日本對外侵略的歷史，因此同學們未必覺得大陸以外地區被日本侵略的歷史對他們而言存在重要意

1) 廈門大學人文學院(歷史系)與經濟學院雙聘助理教授。Email: qiushijie@ntu.edu.tw

義。相較之下，日本的對外殖民史是近三十年的台灣歷史教育以及各大學歷史系的熱點議題，而且台灣的學生顯然對殖民地史有著較高的「熱情」。——儘管台灣學生的這種「熱情」同時包含顯著的「殖民統治美化論」。

為了提起大陸同學的興趣，我做了各種課程上的調整。比方多講一點日本自身的近代化史（特別是近代天皇制與日本資本主義之形成史），少講一點殖民地歷史。這個作法起到了一點作用（也許，理解一個主權國家的歷史比理解殖民地的歷史更容易）。但成效有限。我進一步檢討之後，不得不承認日本對外殖民的歷史是目前的大陸學生較無興趣的課題。我想原因大概有兩點：第一，中國革命讓中國成為真正獨立自主的國家，而這些學生都是在真正作為國家主人翁的環境中成長起來的。第二，整個二十世紀中國有充分的半殖民地經驗，但不是殖民地經驗，因此學生們也無法從自己的父、祖輩獲得殖民地生活的經驗。除了東北（滿州）、港澳，以及各租借的和今天的台灣之外，殖民地經驗距離絕大多數的中國民眾很遠，因而也成為不易理解的問題。在這個意義上，擁有殖民地經驗的東北、港澳，以及台灣，其實很有條件——但迄今未能——將自身的殖民地經驗作為普通中國民眾重新認識中國近現代史的有機的補充。

去年（2018 年）開始，大陸方面允許台灣本地的高中應屆畢業生直接申請就讀大陸的大學，因此我在大陸的大學課堂上意外遇見了許多台灣來的學生。從歷史常識的把握程度來說，台灣來的學生明顯有著較高水平，然而，也正因為許多重要的歷史問題是被當成常識來把握，因此台灣學生經常不能以正確的立場去把握這些歷史問題所意味的價值和是非。比方，台灣學生知道日軍強擄慰安婦的事實，卻容易接受「慰安婦自願論」；台灣學生也知道日本帝國主義以血腥暴力統治台灣的歷史事實，卻不能阻止他們以親日態度擁護「日本殖民統治美化論」。再比方，台灣學生都知道台灣在歷史上是中國的一部分，卻不認為中國曾經統一的事實同時具有兩岸將來應該重新實現統一的價值。——也就是說：歷史事實的認識並不會讓台灣學生認識相應的歷史價值，這成為了台灣學生無法正確把握近現代東亞史的核心問題。

儘管我們也可以認為台灣學生純粹是因為「知道的歷史事實不夠多」所以無法認識到相應的歷史價值，但我覺得，問題的關鍵恐怕並不在於歷史事實的認識多寡。

因為台灣學生也可以在自己對歷史事實所知不多的情況下，產生「事實與價值完全合一」的態度。比方，絕大多數的台灣學生正是用某種「事實與價值完全合一」的立場出發——也就是台灣目前與中國大陸相對治的局面以及台灣社會普遍存在的反共立場——去排斥其他的事實及其相應的價值。因此，台灣學生不但不能看到「兩岸曾經統一的歷史事實」如何強烈規定了迄今為止的台灣歷史走向，也拒絕承認「大陸的學生可能知道與台灣學生一樣多的歷史事實」。比方，台灣學生往往預設大陸學生是被政府「欺騙」的一群，因此總是預設大陸學生不知道一九八九年運動的存在。但事實上，大陸學生儘管沒有正式的渠道認識一九八九年的運動，卻總能有一套認識那場運動並賦予評價的方法。問題只在於：台灣的學生不願意接受大陸學生有自主權力擁有不同於台灣學生的看法。——台灣學生永遠認為自己才是對的。

通過課堂教學，我深深感受到現在的台灣學生似乎認為人類的歷史已經終結，而台灣和美國、日本、韓國等「自由世界」一同站在人類歷史發展的「最高階段」。這種終結感是以蘇聯和社會主義陣營的解體以及中國大陸的改革開放為前提，並以中國大陸作為台灣比較的對象。台灣學生相信台灣已經掌握了人類所有的進步價值（2019年台灣當局通過的同性戀婚姻法案更讓台灣青年世代感到這種快感。我在台灣學生和大陸學生並存的課堂上能夠鮮明感受到這點），因此，儘管經濟發展和物質建設的速度遠遠無法與中國大陸相比，儘管台灣目前的階級矛盾與社會危機已經非常深刻，但台灣學生的腦中還是普遍幻想台灣的「現狀」是好的，因此台灣必須要「維持現狀」。既然「維持現狀」比認識台灣的「歷史」和規劃台灣的「未來」更為重要，台灣學生也就沒有必要凡事都去追求歷史事實和歷史價值之間的合一了。

通過課堂教學，我深刻感受到：台灣學生迫切需要重新認識二十世紀中國革命，進而重新認識自己與祖國（中國）的關係以及台灣與東亞的關係。為什麼認識二十世紀中國革命史是重要的？雖然今天的台灣已經以台灣史研究和相關的歷史知識普及作為主流，但這樣的台灣史研究始終不包含台灣人民的反帝反封建運動史。因此，日本帝國主義殖民統治下的台灣被塑造成不斷「近代化」的美好時代，而且台灣民眾被形容成「甘願接受日本統治」的順民。相較之下，1945年台灣光復（台灣脫離日本殖民統治，回歸祖國）之後的歷史則被醜化成「中國人壓迫台灣人」的「民族壓迫史」。在上述扭曲的歷史認識之下，渴求美國乃至日本的「保護」已經成為台灣

新一代青年默認的前提，因此，「南京大屠殺否定論」、「慰安婦自願說」、「殖民統治美化論」、「放棄釣魚台主權論」，乃至「和日本人一起討厭韓國」的心態竟然也為許多台灣青年所接受。——顯然，這正是因為二十世紀中國革命的歷史始終被台灣的主流歷史教育所排斥的後果。由於台灣學生根本不可能重新把握住作為中國革命一部分的台灣人民反帝運動史，認識不到台灣人民真正的主體性歷史動力和歷史定位，於是才會產生各種扭曲的歷史認識。某種意義上，扭曲的歷史認識恰恰體現出現存的台灣仍然處在某種殖民統治的延伸線上——也就是美日帝國主義支配下的新殖民地統治。

通過課堂教學，我還感受到：只要大陸同學能夠產生對殖民地歷史的興趣，我相信必然能夠大幅促進兩岸交流與東亞和平。自從兩岸開放人員來往（特別是允許大陸學生來台灣攻讀學位或短期交流）以來，已經有不少大陸同學能夠以不同於一般大陸學生的角度看待台灣（儘管，其中也有許多學生不加批判的接受台灣的各種主流說法特別是台獨派的論述）。然而，更重要的是真正了解台灣被日本殖民統治以及被國民黨統治下的台灣歷史，了解台灣民眾在二十世紀遭遇的苦痛，並且重新從寶貴的中國革命的歷史經驗和理論積累出發，如此才能在兩岸之間產生真正有效的交流。

二、在中國崛起的過程中，日本與東亞各國之間的歷史問題遭到了遮蔽

今年七、八月以來，在香港「反修例」運動的影響下，台灣各地的大學校園也出現了支持香港的「連儂牆」（Lennon Wall），進而引發了台灣學生和在台灣留學的大陸學生之間的激烈衝突。大陸學生普遍被壓制了表達的自由。近日，在韓國也圍繞著香港問題而在韓國本地學生和中國留學生之間發生激烈對峙。當然，香港本地對大陸籍民眾的排外更是到了激烈的地步，為了避免遭到暴力攻擊，香港各大學的大陸學生已在本月初大量撤離香港。有人比喻，這場針對大陸民眾的大規模排外運動，簡直就如1938年納粹黨在德國全境襲擊猶太人的「水晶之夜」（Reichskristallnacht），而大陸學生的緊急撤離則宛如香港版「敦克爾克大撤退」（Dunkirk Evacuation）。

中國大陸以外的韓國、台灣，以及日本輿論顯然更同情香港的「反修例運動」。儘管香港的「反修例」運動者高舉起英國殖民者的旗幟以及美國國旗、儘管這些運動者鮮明表露出法西斯主義的排外傾向、儘管回歸後的香港實際上擁有比港英時代更多的民主權力和自由，但日韓台等地的輿論卻仍然以極其抽象的態度看待香港的問題。從臉書（Facebook）的言論狀況來看，我的許多日韓朋友總是不加批判地相信各種有利於批判中國政府和香港特區政府的假消息，也不想知道「一國兩制」的實質與意義。至於英國殖民香港一百五十年間的暴行以及香港回歸後所獲得的成就，彷彿從來就不存在。

香港目前的狀況讓我想起了 2014 年台灣爆發的「太陽花運動」。在這場排外主義運動中，許多台灣青年學生以著彷彿自己是「日本人」的姿態，斥責他們反對的政客和「中國人」是「支那賤畜」。我們都知道，「支那」是近代日本對中國的蔑稱，但這樣的蔑稱卻可悲地在今天的台灣成為青年學生攻擊敵人的語言。諷刺的是：太陽花運動所反對的兩岸經貿協議（ECFA）即將在 2020 年到期，而今天的台灣民意竟然普遍不願面對台灣極可能失去 ECFA 的事實。

2014 年的台灣與 2019 年香港所爆發的這兩場反中國運動在日韓等地得到了許多「進步人士」甚至是「左翼人士」的支持，其中也有不少人是本來覺得應當親近的朋友。因此，這些朋友對於港台反中國運動的支持格外讓人感到困惑。我感到，本來承擔著最多歷史罪責的日本，竟然在港台一系列的反中國運動中偷偷卸掉自己的責任；本來應該由東亞民眾團結起來一起反對的美日帝國主義，竟然已經不是東亞民眾率先反對的對象。顯然，擺在眼前最令人憂心的趨勢，就是日本懸而未決的各種歷史問題因為這些製造出來的一系列的對華衝突而被轉移。而中國大陸青年和大陸周邊區域青年（如香港、台灣、韓國、日本）之間的對立，已經空前成為嚴重的問題。當越來越沒有人去追究殖民統治的歷史問題，反而群起責怪曾經遭受帝國主義殖民侵略的中國之時，無疑體現出中國革命所代表的自主、社會主義、近代化路線正在與西方發生嚴重衝突。中國大陸和大陸周邊區域之間已經形成越來越強固的「分斷體制」，新「冷戰」彷彿正在回潮中。

在新冷戰逐漸回潮的當下，台灣、韓國等地歷史上的民眾鬥爭史也逐漸伴隨著現

實政治的綁架而被「等級化」。在今天的韓國和台灣，最為稱頌的民眾鬥爭似乎都是八十年代以來的民主化鬥爭經驗。至於五十年代以前規模更為廣大、死傷更為慘烈、與社會主義實踐更為緊密的各種鬥爭和犧牲——台灣「五十年代白色恐怖」、韓國濟州四三事件、麗水順天事件，以及日本殖民統治時期的各種抗日運動，等等——則在「等級化」的過程中，被歸類為價值不如八十年代民主化鬥爭的某種「次等事實」。

把不同的歷史事實加以「等級化」的現象可以從半個世紀以來在國際歷史學界造成消極影響的「相對主義」（relativism）思潮來理解。著名歷史學家 E. Hobsbawm 曾在短文《今日馬克思主義歷史學》（Marxist Historiography Today）指出：相對主義本身取消了過去是否存在模式與規律的問題，而且慣於強調歷史進程的偶然性，因此總是排除馬克思主義者特別喜歡的通則化（generalizations）。實際上，這種相對主義的論點反對任何科學。Hobsbawm 接著指出：對於今天的歷史學來說，相對主義的政治危險是「反普遍主義」或者「我的真理跟你的真理一樣實在。」這種相對主義思潮很自然地訴諸於各種形式的認同團體的歷史（identity-group history）。對各種認同團體而言，歷史的主要課題並不是發生了什麼，而是歷史如何與一個特定團體的成員有關。對於認同團體所訴諸的歷史來說，最重要的不是理性解釋，而是「意義」；不是發生了什麼，而是團體的成員如何定義自身。²⁾ 近年，日本的歷史學期刊《歷史評論》也指出：『當前的世界，彌漫著各種主張自己的記憶為正確的記述或表現；比起冷靜的世界觀，對於過去的感情被看得更為重要。此中，以東亞的殖民主義和戰爭為中心的記憶問題迄今猶在延續。』（《歷史評論》2017 年 8 月號編者按）。

Hobsbawm 將相對主義的基礎上建構起各種認同團體自身歷史的現象稱為「記憶的爆發」。但 Hobsbawm 沒有注意到：「記憶的爆發」並不意味著「爆發」出來的各種記憶之間能夠彼此平等對話。實際上，獲得主流地位的特定認同團體（比方台灣的分離主義運動）更傾向壓制或收編別人的記憶。也就是說，相對主義思潮裡面仍然存在著絕對的記憶霸權。這種記憶霸權不必然需要消滅他人的記憶，但記憶霸

2) Eric Hobsbawm, "Marxist Historiography Today," in Marxist History-wri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權可以將自身無法解釋的歷史事實加以「等級化」，從而賦予不同歷史事實以各自不同的價值。而當不同的歷史事實依據現實政治的需要而紛紛遭到等級化，東亞各地區的民眾便越來越難認識彼此之間的歷史，而且也越來越難認識自己真正的歷史。

我經常懷念 1997-2002 年間由韓國、琉球、日本、台灣等地共同主辦的「東亞冷戰與國家恐怖主義研討會」。包括徐勝先生、林書揚先生（台灣坐牢最久的政治犯，3 4 年 7 個月）、陳明忠先生（台灣最後一個政治死刑犯），以及陳映真先生（台灣著名作家、政治犯）為代表的許多前輩，超越了國境的藩籬、握起手來，共同為了東亞的和平與人權而奮鬥。這些前輩能夠毫無顧忌地分享自己的經驗，也能理解國外朋友們的經驗。而這些前輩所共享的經驗是什麼？正是遠遠早於八十年代民主化鬥爭之前的民眾鬥爭歷史。然而而這段歷史卻是韓國與台灣的「等級化」敘事之中不斷被貶低的對象。

當八十年代民主化運動的經驗取代了更早期的民眾鬥爭經驗，東亞各地的民眾之間便失去了可以相互感動的基礎，同時也無法與繼承了二十世紀東亞革命傳統的中國大陸以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交流。為什麼擁擠著八十年代民主化鬥爭經驗的（台灣與韓國的）人們似乎更容易站在美日與西歐國家的立場去評判今天發生在東亞的種種事件？總體而言，東亞內部的共同經驗與國際連帶的經驗正在被美日主導的普世價值幻象所解消；而遭到過分強調的（台灣與韓國的）八十年代民主化鬥爭經驗，竟然成為這種普世價值幻象的重要組成部分。

三、超克「遺忘→記憶→再遺忘」的精神困境

如前所述，我在課堂上碰到的台灣同學知道許多歷史事實，卻不能從這種歷史事實中得出我認為應有的價值判斷。這種奇特的狀況不得不讓我反覆思考「記憶」與「遺忘」的關係。對於台灣學生來說，1895-1945 年間的台灣抗日運動史以及國民黨在五十年代發動的白色恐怖，都是在台灣當局長期強迫民眾「遺忘」的前提下，直到近三十年才逐漸「被（台灣政府）允許民眾知道的歷史事實」。然而，台灣學生重新獲得的「記憶」並不是為了克服「遺忘」。台灣學生目前體現出來的思想狀況，更像

是「在記憶中再次遺忘」，即「遺忘→記憶→再遺忘」。這是一種刻意「遺忘」特定歷史事實及其價值的過程，也是一個把民眾鬥爭的經驗重新「等級化」的手段。比方，近年的台灣分離主義學界相當熱衷於「五十年代白色恐怖」的研究，因而對當時犧牲的許多中共在台地下黨案件進行了深入的探討。但他們的研究成果卻認為：「台灣人在四十年代參與地下黨是合理的，但這種合理性不等於今天應該效法他們。」或者認為「如果當年參加地下黨的犧牲者能夠活到今天，他們也會支持台灣獨立或者反對中國。」——顯然，只有當這些被歸類為「最低等級」的歷史事實（比方四十年代台灣的中共地下黨鬥爭）被強迫與主流意識形態規定為「最高等級」的價值（比方反共的台灣分離主義）結合在一起的時候，才能獲得記憶的資格。然而這種記憶不就同時等於遺忘嗎？台灣知名作家陳映真先生曾提到日本殖民統治與國民黨統治造成了台灣民眾普遍存在的「祖國喪失症」以及相應的「白癡化現象」。某種意義上，「遺忘→記憶→再遺忘」就是這種「白癡化現象」的典型體現。

魯迅所寫的《為了忘卻的記念》是反思「記憶」與「遺忘」的經典文本。如所周知，《為了忘卻的記念》是魯迅為了記念慘遭國民黨殺害的「左聯五烈士」而寫的一篇文章。魯迅在這篇文章的最後寫道，關於這些在國民黨迫害下犧牲的烈士，「我不如忘卻，不說的好罷。但我知道，即使不是我，將來總會有記起他們，再說他們的時候的。」對於二十世紀以來的中國人來說，《為了忘卻的記念》這篇文章幾乎都是圍繞著「將來總會有記起他們，再說他們的時候的」而被理解的。因此，「為了忘卻的記念」這句話不但從此成為二十世紀中國關於如何記憶歷史的經典名句，甚至還進一步衍伸出「不能忘卻的記念」這種後起的新句子。³⁾

然而魯迅所撰寫《為了忘卻的記念》只是為了「記念」嗎？徐京植教授在其文集《漫長嚴峻的道路》（長くきびしい道のり）一書中指出：

我和魯迅最初的相會，大概是在中學之時所閱讀的《為了忘卻的記念》，其

3) 如果在中國搜尋引擎「百度」上精確檢索「為了忘卻的記念」以及「不能忘卻的記念」這兩句話，將發現出現頻率最高的就是「不能忘卻的記念」這個句子。這個現象顯示二十世紀以來的中國人更重視的是如何通過記憶的篩選和建構，進而形成一個以全民族為範圍的強大的認同團體。

中「照直說，就是我倒要將他們〔左聯五烈士〕忘卻了」這樣的表達方式，我在相當一段時期裡面只是將其理解為一種具有魯迅風格的、極其辛辣的、反話般的文學表現。但是，而今我卻產生了如下的新想法。我想，魯迅真的是將之〔左聯五烈士之犧牲〕忘卻了的。我想，大概是那樣想的吧。而對我而言，老實說，我也真的不願再想起了。由於不願想起的日子是一日一日地持續下去，於是也就只能毫無辦法地繼續想下去。只要可以在什麼地方中斷的話，說真的，我也想要就這樣忘卻。——我真的是這樣想的。

（私が最初に魯迅に出会ったのは、中学ぐらいの時のことですが、「忘却のための記念」の「ありていにいえば、私は彼らを忘れたかったのだ」という言い方を、魯迅流の非常に辛辣な反語的文学表現というふう理解してきた一時期がありました。しかし、今となっては次のように思います。彼は、ほんとうに、そのことを忘れたかった。多分そうだと思うのです。私もまた、正直を言いますと、あまり思い出したくない。思い出したくない日々が毎日続いているから仕方なく思い出しているわけです。これがどこかで切れ目を迎えさえすれば、ありていに言えば、私も忘れてしまいたい、と思っているのが正直なところ。）

徐京植接著說：

先不論現在的中國如何評價魯迅對於1931年國民黨白色恐怖的痛恨的記憶，現在也已然可說是歷史事件了——當然許多人正是因此而懷抱著不能表現的或痛或苦而犧牲——我想，如此陳述也是可以的。從日本帝國主義的殖民地支配以及緊接著1945年我國的獨立與分斷以來，我國流淌了無數鮮血也被迫發出了悲鳴，如果可能的話，我，甚至不只是我的兄弟們，都不能不盼望那能夠將這一切都推往幸福的、忘卻的彼方的日子能夠早一天來到。為此，在我能力所及的範圍裡，不光是為了獄中兄長們〔案：徐勝（서승）先生與徐俊植（서준식）先生〕的自由，關於我們民族以及我們國家全體命運，我有相當部分的思考也是由之展開的。

（一九三一年の国民党白色テロについての魯迅の痛恨の思い出は、現在の中国をどう評価するかは別にしまして、いまでは歴史上の出来事と言えるようになった——もちろん、表現できない痛みや苦しみを抱いて多くの人が犠牲にな

ったわけですが——、そう言ってよ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きることならば、私は、もちろん私の兄弟だけでなく、日帝の植民地支配とそれに続く一九四五年のわが国の独立と分断、それ以来流されてきた多くの血、発せられた悲鳴、できればそういうものを幸福な忘却の彼方へ押しやれる日が一日も早く来るように願わずにはおれないのです。そのために、私なりに、獄中の兄たちの自由という個別的なことばかりでなくて、民族、わが国全体の運命について思いをめぐらすことが多いのです。）⁴⁾

徐京植先生關於「忘卻」的感想，以真實而痛苦的「記憶」作為前提。因為已經有了這樣真實而痛苦的記憶，才進一步產生「如何遺忘痛苦的記憶」的要求。然而這不是純粹的「遺忘」，而是要求把「遺忘」和「記憶」、把「過去的痛苦」和「未來的幸福」全部聯繫起來。這種「把全部聯繫起來」的要求，必然逼使人們從「過去的痛苦」出發，在當下實現社會變革，並通向「幸福的未來」。⁵⁾就此而言，「遺忘→記憶→再遺忘」完全不把「幸福的未來」當成目標，而是把「過去的痛苦」當成「維持現狀」（比方海峽兩岸的分斷）的工具。通向未來的實踐已經在「維持現狀」的大目標中解消，因此任何的「遺忘」仍然是「遺忘」，而「記憶」卻成為更深層的「遺忘」。

四、小結：在民眾鬥爭的歷史中發現自己與他人的歷史

今天的東亞——至少中國（大陸、台灣、香港）、日本、韓國／朝鮮——正處在歷史記憶高度分裂，而且幾乎沒有任何歷史問題得到克服的狀況中。此時的我們比任何時候都需要重新回顧二十世紀東亞各地民眾團結鬥爭反抗帝國主義的歷史經驗，

4) 徐京植，《長くきびしい道のり》，東京：影書房，2001，頁86-88

5) 如汪暉所言：『「記念」是一個將「被動的記憶」轉化為「主動的忘卻」的行動。——這裡的關鍵問題不是忘卻與記憶，而是主動與被動。』『沒有「記念」的「忘卻」只不過是一種怯弱的奴隸道德，而「為了忘卻」意味著投身新的行動、面對新的現實，並從「過去」中獲得解放。』『「為了忘卻的記念」是理解重複中的不可重複性——亦即事件的獨特性——的通道，由此人們才能自覺地投入新的行動，而不是匍匐在過去的紀念碑下，重複先前的軌道。「為了忘卻的記念」由此成為一種政治行動，一種通過與歷史慣性的斷裂而產生的政治決斷，一種理解問題的當下性的必要契機。』見：汪暉，《紀念碑的限度，或真知的開始》，《今天》第109期「汪暉特別專輯」。

並嚴峻地重新審視那些在今天被特別突出的歷史經驗及其意義。只有如此，我們才能不以西方的價值觀評判中國與朝鮮等社會主義國家的發展，而東亞各地的民眾也才能直接面對真正屬於自己的歷史。只有真正地面對和了解自己的歷史和他人的歷史，我們才能為克服歷史問題與東亞和平，走出有意義的一步。

Memo _____

_____ Memo

Memo
